

어떤 점에서 언론이 보도기관이라는 것은 사전적 정의에 해당하는 당연한 말이다. 그러나 현실의 언론기관, 특별히 신문언론은 정파적 의식을 갖고, 권력기관의식을 갖는 기구로 존재하고 있다. 차기 정권이 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정파적' 의식이 신문언론사, 특별히 신문언론사의 상층부에 내재화되어 있고 기사의 '구성'과정에 관철되고 있는 현실이 바로 그것이다. '정권이 누구 수중에 들어가던간에' 그것에 구애되지 않고 언론이 올바른 '보도'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⁷⁰⁾. 사실 언론개혁은 언론 자신들에게 '몸에 쓴 보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언론개혁을 단순히 '진보적' 운동이라고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구체제 하에서 '왜곡화된' 일그러진 언론을 '정상'으로 되돌려놓기 위한 국민적 '정상화'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영역은 정상화되고 사회운동을 정상화된 현실 자체의 새로운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운동의 단계로 가야 하는데, 그와 함께 유독 후진적인 언론개혁의 문제를 실현하고 가야 할 것이다.

앞서 제도정치와 정치사회의 세력구성에서 과거의 극우보수주의정당은 합리적 보수주의 정당으로, 반독재야당은 개혁적인 중도자유주의정당으로 변화해가고 있으며, 진보적인 정당이 제도정당화하는 단계로 확장되고 있음을 서술하였다. 어떤 점에서 이런 변화는 보수주의적 언론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의 역동성에 의해 실현된 것이라고 해야 한다. 보수적 언론은 이러한 변화 자체에 저항하였고 보수주의세력의 유지재생산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어떤 점에서 제도정치의 영역에서 보수주의세력은 자리를 잡아가고--여전히 강력하지만 약화되고 있음--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보수언론도 제자리를 찾아야 하고 범시민사회진영이 이러한 보수언론의 제자리 찾기운동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필자가 생각할 때, 보수언론의 제자리는 제도정치의 변화에서도 정당이 그러하였듯이 '여전히 강력하지만 약화되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비정상적으로 보수적이고'비정상적으로 왜곡된 '보수언론에서 정상적 언론으로, 합리적 언론으로 변화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보수정당'으로 한나라당의 환골탈퇴를 주문했던 것이 보수언론에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보수언론들이 자체적으로 정상화되고 합리화되어야 하지만 진정한 정상화와 합리화는 이러한 보수언론의 여론독점력과 신문시장 독점력이 약화되는 데서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와 같이 조선일보가 200만부 이상의 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여론질서'에 비추어 볼 때 왜곡된 것이다. 100만부 정도로 축소조정되는 것이 진정한 정상화의 경험적 지표라고 생각된다. 실제 그 정도의 보수적인 층이 존재하는 것은 다원적인 사회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와 같은 보수적 언론'의 영향 하에 있지 않아야 할 시민과 민중들이--때로는 개혁적인 지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그러한 영향 하에 있다는 것이 진정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시민운동을 포함하여 범시민사회진영은

70)조선일보사 주필이 97년 대선국면에서 편파보도에 항의한다고 조선일보사 앞에서 시위하고 있던 국민신당 당원들을 향해 던졌다고 전해지는 한마디, 즉 '너희들 정권 바뀌면 다 죽어'라는 말은 바로 현재 보수언론의 위치와 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수언론을 권력기관에서 보도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연대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범시민사회 진영의 노력과 함께, 언론 스스로 재벌언론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시장과 언론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여야 하며, 통제된 언론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국가권력으로부터 스스로 독립성을 회복해야 한다. 극우보수이데올로기의 파수꾼이기를 중지하고, 시민사회의 새로운 사상적 담론과 의견을 진지하게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언론이 기존의 왜곡된 국가 및 시장질서 속에서 체득한 논리와 이데올로기로 무장하면서, 시민사회의 역동적 변화와 새로운 목소리를 '주변화'할 때, 언론 자신이 가장 엄중한 개혁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언론개혁에 대한 시민사회의 더큰 참여와 언론사 내부에서의 자성적 노력들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사회포럼에서는 이 문제를 의제화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와 함께 사회운동, 특별히 시민운동의 경우 언론의존적 운동방식과 허구적인 '평균적인 정치적 중립성'의 틀을 과감하게 벗어날 필요가 있다. '정치적 중립성' 정치적 불편부당성'이라는 이름으로 보수언론의 '왜곡보도'에 대하여 우회하려는 자세를 극복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8)신자유주의적 기조를 막기 위한 시민·민중운동의 연대

향후 노무현 정부 하에서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를 막아내고 정책의 사회성을 강화하는데 있어서의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의 연대의 중요성을 언급하여야 한다. 이미 문민정부와 국민정부 등 민주정부를 통해서 진행되어 온 신자유주의적 성격의 '경제적 자유화'는 민중들의 삶에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노무현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강제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노무현 정부가 보다 철저한 '시장경제의 민주적 개혁'을 수행하는 단계를 뛰어넘어 '사회적 시장경제'로 나아가도록 하는 압력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국민정부의 '민주적 시장경제'의 부작용이 소득분배의 악화와 고용구조의 광범한 비정규직화 등의 문제로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경제의 '사회적' 규제와 규율을 향한 정책적 실천과 혁신담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는 시장권력에 의해 부단히 허구화되며 위협받게 된다. 이것이 '자본제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문제이다. 한국에서의 정치적 민주주의는 일반적으로 민주주의가 시장권력에 의해 위협받는 것 이상으로, 천민적인 재벌권력에 의해 위협받으며, 또한 IMF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개방화와 민영화 등으로 상징되는)에 의해 위협받았다. 시장경제에 사회적 관점을 도입하려는 노력은 우리 사회에서는 언제나 기업경영의 위축이나 국민경제의 고사라는 이름으로 비판받는다. 국민정부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은 시장경제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기존의 천민적 시장경제의 민주주의적 개혁을 수행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후자가 일정하게 진행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 정부는 시장경제의 보다 철저한 민주주의적 개혁이

라는 과제와, 국민정부를 뛰어넘어 사회적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과제를 부여받고 있고, 사회운동진영은 이를 강제하기 위한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계화의 새로운 조건은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으로 하여금 세계화에 대응하는 과제를 동시에 부여받게 되었다. 민중운동은 보다 직접적으로 자본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피해자가 됨으로써 보다 직접적인 반세계화 투쟁을 전개하게 된다. 그러나 시민운동 역시 서구의 신사회운동이 저항대상으로 하였던 질서가 세계화의 파급적 결과에 의해 더욱 후퇴하고 있는 현실에서 세계화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린피스와 같은 국제환경단체, 앰네스티와 같은 국제인권단체, 온건한 개발단체 까지도 반세계화의 문제의식을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맥락과,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역동성이 공존하는 한국의 현실에서, '전투적 민중운동과 진보적 신사회운동의 세계사적 동맹모델'을 만드는 것은 결코 꿈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9)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노동정치세력이 '선거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계급의식 없는 계급사회'에서의 진보정당의 노동자계급 '형성'적 역할

민주노동당은 97년 대선에서는 보다 직접적으로는 306,000표(1.6%), 더 소급한다면 92년 대선에서의 민중후보 20만여표(1.0%)를 뛰어넘어, 96만표(3.9%)를 획득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하였다. 2002년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은 비록 의석은 존재하지 않지만 제3당으로서의 상징적 지위를 확실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2004년 총선에서의 의석 확보는 의석 수의 문제이지 의석 확보 자체는 확정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앞으로 민주노동당의 전도는 3가지 변수에 의해서 영향 받으면서 결정될 것이다. 첫째는 좌파정치세력과의 관계이다. 둘째는 환경정치세력과의 관계이다. 셋째는 노동당의 기반이 되는 노동자계급과의 관계이다.

첫째의 문제와 관련하여 필자는 민주노동당은 사회민주당적 성격을 지배적으로 하면서 기타의 다양한 성격이 복합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민족해방파적 성격, 국제사회주의적인 요소, 사회민주당을 넘는 좌파적 요소, 진보자유주의적인 요소 등 다양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문제는 사회민주당 보다 좌파적인 정치적 세력들이 민주노동당과 분립하면서 존재할 것인가 민주노동당이 좌파연합적인 성격으로 존재할 것인가하는 점이다. 필자는 사실 선거정치의 공간에서--앞서 노동자계급의 급진적인 정치적 형성전략을 이야기했지만--민주노동당이 취할 수 있는 슬로건과 행위양식은 일정하게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민주노동당이 스스로를 '사회주의정당'이라고 표방하면서 활동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사회주의나 기타 진보적 이념들이--비록 그것을 개개인이 수용하느냐 여부는 차치하더라도--자유롭게 토론되고 이러한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지 않는 조건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⁷¹⁾.

둘째는 환경정치세력과의 관계이다. 이미 87년 이후 시민사회의 역동화 과정 속에서 환경

운동은 사회세력으로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왔다. 앞서 서술한 정치지체의 조건 속에서 '대의의 대행'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시민운동의 주도적인 운동으로서 환경운동은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지향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여기서 민주노동당이 생태주의적인 요소를 강화하면서 환경'사회'운동의 정치적 대의를 대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환경정치세력이 독자적인 세력화를 하면서 노동당과 환경당이 경쟁하면서 기성정당을 압박하는 형국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노동당이 실제 노동당적 성격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현재 노동당에게 제기되는 문제는 '계급의식이 없는 노동자계급'과의 결합의 정도가 약한 상황에서 향후에 스스로 노동당적 성격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노동자계급의 정치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점이다.

노동당에게 제기되는 우려는, 노동자계급이 충분히 의식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한 노동자계급과의 밀접한 결합이 부재한 상황에서, 제도정치권에의 진입에 성공한 노동당이 향후에 선거정치의 물에 더욱 급속하게 흡수되면서 노동자계급과의 단절은 유지되면서, 기성 제도정치권에서의 진보적 분파로 존재하는 경우이다.

현재와 같은 노동자계급의 계급의식의 발전의 미숙과 노동자계급과 노동당의 결합의 이완은 민주노동당이 제도정치의 논리와 선거주의 및 합법주의에 강력하게 좌우될 가능성을 제기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넘어서 것인가를 진보정당의 주체들과 사회운동이 고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언제나 자기대중의 획득과 중간층 대중의 획득이라는 과제는 현실적인 딜레마로 존재한다. 이것을 이른바 '쉐보르스키의 딜레마'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노동자정당으로서의 정체성과 노동자대중과의 결합이 강력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중간층 대중을 획득하기 위한 전략으로 나아가더라도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는데, 민주노동당의 경우 이러한 딜레마가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정당 주체세력들이 민주노동당의 성장과정을 제도정당화나 득표의 과정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형성과정이라고 하는 인식을 철저히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실 노동자계급의 정당이 존재해야 만이 노동자계급이 정치적으로 '존재'하게 된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형성을 노동자 정당에 의해 급진적으로 촉진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사실 보수정당과 자유주의정당의 영향력 하에 있고 이러한 정당들과 스스로를 동일시하는 노동자계급이 민주노동당과의 동일시를 통해서 스스로의 계급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2002년 대선이나 이전의 지

71) 이런 점에서 하나의 중요한 쟁점이 존재하고 있다. 노동정치세력 및 좌파정치세력이 '단일한 정당' 내부에서 공존하는 것이 진보운동의 발전에 좋은 것인가, 분립하여 성장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하는 쟁점이다. 필자는 조심스럽지만 민주노동당을 넘는--민주노동당 보다 좌파적인--진보정치세력이 별도로 분립하고--선거연합이나 연합전선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사회운동적' 차원에서 급진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이념적 확장 및 노동자계급의 의식지평의 확장을 위해서도 좋고, 사회민주당을 뛰어넘는 좌파정당의 공간을 확보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2002년 6월 지자체 선거에서 '사회주의정당'을 표방하면서 활동하였던 사회당의 간접적인 운동적 효과 같은 것을 염두에 둘 수 있을 것이다.

자체 선거에서 보여진대로, 저학력층과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한나라당 지지자가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는 계급계층적 투표의 전도(顛倒)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세대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2002년 대선의 투표행태도 긍정성이 있지만 한계를 갖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급계층적 투표행태의 왜곡은 향후의 투표에서는 일정하게 변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필자는 한국사회가 상층은 계급의식이 존재하지만, 하층에게는 계급의식이 존재하지 않는 기형적인 계급사회라고 평가한다. '계급의식 없는 계급사회'에서, 노동자 계급의 계급의식화를 추동하면서 굳건한 계급적 기반을 갖는 노동자정당으로 자리잡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로 제기된다. 이 도전을 적절히 극복할 수 있느냐에 따라 민주노동당의 성격과 방향이 정형화되어 갈 것으로 생각된다. 의식의 전도,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형성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전도된 계급의식 상황을 극복하면서 노동자계급을 정치적으로 존재케 하는 공세적인 노동자 정당으로서의 자기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5. 요약 및 맺음말

요약한다면, 87년 이후의 민주주의이행 및 민주화가 국가적 수준에서는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인적 수준에서는 과거의 극우보수주의세력 중심에서 중도자유주의세력(예컨대 국민정부나 노무현 정부)이 집권당이 되고 민주노동당과 같은 진보정당이 제도권 진입을 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구체적으로는 사회운동의 요구가 더욱더 제도화된 통로를 통해서 실현되는 '제도화'를 동반하게 된다(예컨대 여성부나 국가인권위의 신설 등). 이러한 정상화와 제도화의 과정은 신자유주의적 성격의 '경제적 자유화'를 동반하면서 새로운 모순을 잉태하고 있다. 사회운동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현실--한편에서는 정상화와 제도화의 도전과 다른 한편에서의 신자유주의적 자유화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도전에 응전하면서 사회운동이 새로운 역동성을 만들어낼 것인가하는 과제가 바로 현시기 사회운동에 제기되어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87년 이후 국가 변화 및 사회운동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전체적인 논의로서, 먼저 국가와 시민사회, 시민사회 내의 계급적·사회적 적대를 둘러싼 투쟁전선을 민주주의전선, 계급전선, 생활세계전선으로 유형화하였다. 이는 민주주의를 쟁점으로 하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대립, 시민사회 내에서의 자본과 노동의 대립, 다양한 사회적 적대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집단 간의 대립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87년 이후 개발독재적 예외국가가 수동혁명적 방식으로 통하여 자본제적(민주주의)국가로 변화해 가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른바 '민주주의이행'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상부구조적 변화를 개발독재적 예외국가가 사회적 투쟁 혹은 계급적 투쟁에 매개되면서 자본주의적 '정상'국가(normal state)로 변화해가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은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의 경로로 진행되는 '수동혁명'적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87년 이후의 민주화의 진전과 그 이후의 수동혁명적 개혁의 과정에서 개발독재적 예외국가의 문제들이 점차 자본주의적 정상국가로 전형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개발독재적 예외국가 하에서의 시장의 '예외적인' 천민성과 국가의 '예외적인' 반민주주의적 억압성은 점차 정상화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변화는 민주주의전선의 경우 국가의 예외적인 폭력성과 반민주성을 쟁점으로 하던 상태에서 민주주의의 실질화와 확장을 쟁점으로 하는 전선으로 변화하게 되며, 시장의 예외적인 천민성과 반민주성을 쟁점으로 하던 상태에서 시장의 합리성과 합리성을 쟁점으로 하는 상태로, 생활세계 전선의 경우 사회적 적대의 폭력적 억압과 주변화를 쟁점으로 하던 상태에서 사회적 적대의 제도화와 체제내적 쟁점으로 하는 상태로 이행하게 된다. 이것은 투쟁전선과 쟁점이 보다 보편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는 방향으로 변화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필자가 여기서 예외국가에서 정상국가로의 변화의 프레임을 사용하는 것은, 87년 이후의 변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87년 이후의 변화과정은 상당부분 예외국가의 정상화--이른바 '민주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과정에 있고 이러한 '정상화'를 추동하고 보다 개혁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운동을 지배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것이 시민운동이다. 이러한 정상화 차원 자체는 분명 87년 이후 중요한 시대적 과제이고 민주운동도 이러한 과제에 복무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정상화에도 불구하고 정상화되는 국가 및 지배질서라는 것은 자본제적인 것이고 새로운 계급적·사회적 적대를 내재한 체제라는 것이다. 사회운동이 예외적이고 비정상적인 국가의 정상화를 추동하고 실제 이것이 실현되면 될 수록 사회운동은 그러한 정상화를 뛰어넘는 과제로 이행하게 되는 것이다. 정상화를 과제로 싸우면서도 이러한 변화를 직시하고 이를 뛰어넘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수동혁명적 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핵심적인 변화들은 제도정치와 합리화, 국가 및 제도정치와 시민사회의 관계에서 제도화된 통로의 확장(제도화)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당질서의 왜곡성의 극복과 다원적 정치질서의 확립과 합리화, '법의 지배' 원칙의 확립, 시민사회적 공공영역의 정착과 역할 확대, 민주진영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공간의 확장 및 개혁적 국가기구들의 출현(예컨대 국가인권위원회나 여성부의 설치 등)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시민사회의 압력과 저항에 의해 촉진된다. 자본주의적 정상국가의 확립은 무엇보다도 근대적인 정치사회의 확립을 통해서 시민사회의 모순과 이슈들이 일상적인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수렴되고 확립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이 사회적 갈등과 투쟁을 통해서 수동혁명적 경로를 통해서 정착되어가게 된다.

다음으로 제도정치와 변화를 설명하기 위하여, 필자는 보수주의, 자유주의, 진보주의의 구분을 사용하였다. 이 각각의 지향내부에서는 다시 온건지향(moderate)과 급진지향(radical)이 존재하게 된다. 이는 국가의 변화에 따른 사회운동의 변화를 정치적·사회적 세력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술하기 위해서였다. 개발독재적 예외국가 하에서 국가 및 제도정치와 이념적 스펙트럼은 대단히 제한된다. 특별히 합법적인 영역에서 활동하는 정치적·사회적 세력이 대

단히 제한된다. 그러나 이후 민주주의이행의 과정에서 이념적 스펙트럼이 확장되게 그만큼 비(非)합법적·반(半)합법적인 (시민)사회 영역에 존재하여야 했던 자유주의적 세력이나 진보주의적 세력들이 합법적인 공간으로 포섭되게 된다. 이러한 정치적·사회적 세력의 확대 과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된다. 즉 해방 이후 현재까지의 정치적·사회적 세력들의 이데올로기적 지향성은, 87년 이전까지는 '보수주의의 극우화' 자유주의의 어용화, 진보주의의 소멸과 비합법화, 60·70년대에는 "극우 보수주의와 발전주의와의 결합, 자유주의의 분화(어용적 자유주의와 저항적 자유주의화), 진보주의의 새로운 출현", 80년대에는 "극우보수주의의 분열, 저항적 자유주의의 확산과 진보주의와의 결합, 진보주의의 급진화와 전투화", 마지막으로 87년 이후는 "보수의 합리화" 자유주의의 진보주의로부터의 독자화 및 개혁주의화" 진보주의의 분화"로 특징지워질 수 있다.

이 글에서는 61년부터 87년까지의 체제는 개발독재적 예외국가로 파악하였다. 이 개발독재적 예외국가 하에서, 시민사회는 '저항적 활성화'를 경험해 갔는데, 이러한 저항적 활성화 속에서 3가지 투쟁전선 역시 활성화되어갔다. 먼저 억압적이고 통제적인 독재적 예외국가에 대한 반독재 민주주의 투쟁의 활성화였다. 다음으로 시민사회의 저항적 활성화의 과정은 시장 및 자본의 성장에 조용하는 계급적 운동의 출현 및 성장의 과정이었다. 셋째, 개발독재국가에 대항하는 시민사회의 저항적 활성화의 과정은 개발에 따른 생활세계의 모순에 대응하는 운동들의 출현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세계의 모순에 대응하는 다양한 운동들은 그 자체로 인정받기보다는 반독재 운동의 일부로서 파악되었다. 이러한 개발독재적 예외국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저항의 정점이 바로 1987년 6월 민주 항쟁이었다.

개발독재적 예외국가 하에서는 제도정치 영역이 극단적으로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괴리 현상이 극단적으로 존재하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제도정치로부터 '배제'된 정치세력과 시민사회의 반독재 사회세력이 연합하여 반독재민주화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필자는 개발독재적 예외국가 하에서의 사회운동의 '구심력적 심화'로 표현한다. 이것은 제도 정치로부터 배제된 저항적인 자유주의세력(온건 야당 세력)과 장외 사회운동 세력의 결합, 사회운동 내부에서의 급진적 저항 운동 세력의 등장 및 사회운동 내에서의 계급적 지향의 분화, '급진적 저항 운동 세력의 헤게모니하에서 다양한 저항 운동들의 반독재투쟁으로의 수렴'을 의미한다. 이것은 3가지 투쟁전선이 반독재라는 시대적 과제를 중심으로 수렴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87년 이후 개발독재적 예외국가가 수동혁명적 방식으로 통하여 자본제적 (민주주의)국가로 변화해 가는 것으로 파악하는데, 개발독재적 예외국가의 포스트-개발독재적 예외국가로의 변화의 성격은 다양할 수 있다. 민주주의이행의 유형은 '아래로부터의 급진적 민주주의의 길'과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주의의 길'로 나눌 수 있는데, 후자의 경로는 그람시적 표현에서 보면 '수동혁명'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87년 이후 민주주의이행을 '개발독재적 예외국가의 자본주의적 정상국가로의 수동혁명적 이행으로 파악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수동혁명적인 방식의 민주화 혹은 민주주의이행은 세계화의 맥락에서 전개된다. 여기서 민주화와 세계화의 결합적 진행이 나타나게 된다. 민주화와 세계화의 결합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자는 민주화를 이중적 과정으로 분석하였다. 즉 민주화는 정치적 자유화의 과정이며 동시에 경제적 자유화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정치적 자유화란 정치적으로 과거의 독재적 억압정책을 자유와 자율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고, 경제적 자유화란 경제적으로 국가에 의한 시장통제와 기업통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적 자유화는 자율화와 제도화로 구성되며, 경제적 자유화는 시장자율화와 개방화로 구성된다. 민주주의이행과정에서 관철되는 경제적 자유주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의해 규정되면서 신자유주의적 버전(version)의 경제적 자유주의로 실현되게 된다.

역설적인 것은, 경제적 자유화의 과정이 정치적 자유화가 가속화되는 '민주정부' 하에서 더욱 촉진되게 된다. 경제적 자유화의 정치적 조절의 필요성이 약화되고 정치적 정당성 때문에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적 자유화를 촉진하는 '민주정부' 하에서 경제적 자유화는 더욱 촉진된다는 것이다. 실제 문민정부는 세계화 담론을 최초로 국가적 담론으로 부각시키면서 개방화와 시장자율화를 촉진시켰다. 국민정부 하에서는 정치적 자유화가 제도화의 단계로 까지 발전하면서(국가가 시민사회의 요구에 대하여 보다 개방적이 되고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화된 통로까지 만들게 된다. 예컨대 여성부 신설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등) 정치적 자유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지만, 다른 한편에서 신자유주의적 성격의 경제적 자유화가 가속화되면서 그 '재앙'을 경험하게 된다(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비정규직화의 증대, 소득분배 구조의 악화 등).

87년 이후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시민사회의 '주체적 활성화'가 촉진되는데--이전의 '저항적 활성화'는 구분되게--이러한 새로운 활성화 속에서 투쟁전선의 상황도 변화하게 된다. 먼저 민주주의전선과 관련하여, 시민사회의 주체적 활성화는 한편에서는 쟁점화되지 않았던 이슈들을 중심으로 시민사회가 '정치화'되거나 다른 한편에서 시민사회의 각종 계급계층이나 집단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요구나 이해를 실현하기 위한 주체적 태도가 고양되어 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민정부 하에서는 제도화의 진전으로 인하여 민주주의전선에서의 투쟁은 제도화되거나 체제 내적 방식으로 표현되거나 일부는 '수동화'되게 된다. 다음으로 계급 전선에서의 주체적 활성화를 들 수 있다. 계급전선에서의 시민사회의 활성화는 노동운동을 포함한 민중운동의 조직적·정치적 발전으로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국민정부 하에서는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협의적 모델이 도입되었지만, 개방주의적이고 시장주의적인 경제정책들이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이름으로 광범위하게 도입됨으로써 경제적 자유화의 재앙을 둘러싸고 계급전선의 긴장과 활성화는 확대되어 가게 된다. 다음으로 생활세계에서의 다양한 사회적 균열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주체적 활성화를 들 수 있다. 기존에 쟁점화되지 않았던 이슈들을 쟁점화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국민정부를 경과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학벌철폐, 환경이슈 등 다양한 생활세계의 쟁점들이 중심적인 이슈로까지 부상하게 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개발독재적 예외국가의 수동혁명적 변형과정에서 가장 비정상적으로 지체되는 영역이 제도정치영역인데 여기서 '정치지체'가 문제시되고 이에 대응하는 시민운동의 '대의의 대행' 현상, 즉 시민운동이 준정당적 기능을 수행하는 역설적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역설적 상황 속에서, 제도정치들이 사회운동의 개혁압력에 추동되면서 일정하게 정상화되어가는 방향으로 변화해가게 된다. 시민운동의 정치개혁 압박운동과 함께 진보적 사회운동세력에 의한 진보정치세력화의 시도도 나타나게 되었다.

국민정부 하에서는 낙천낙선운동과 같이 '대의의 대행' 현상의 정점에 이르게 되지만, 동시에 시민운동의 약진의 근거에 자리잡고 있었던 복합적인 요구들이 다양한 실천형태로 분화되게 된다. 즉 시민운동의 약진의 근거에는, 지체된 정당질서의 근대적 정당질서로의 변화를 바라고 이를 개혁하기 위한 요구, 제도정치의 이념적 폐쇄성을 극복하고 진보정당의 진입을 향한 요구, 근대적 정당 자체의 한계를 넘어서고자하는 '생활'정치적인 요구, 제도정치 자체에 대한 '외적' 감시 요구 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첫 번째의 지향은 노사모나 개혁국민정당 같은 형태로 분화되게 되었으며, 두 번째 지향은 민주노동당의 약진으로 표출되었다. 시민운동 입장에서는 시민운동의 준정당적 역할을 가능하게 하던 국민적 지지동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시민운동은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제도정치 외부에서의 정치개혁 압력운동을 지속하기 위하여 스스로 전문적인 감시역량을 강화해야 할 과제와, 제도정치의 '제도주의적' 한계 자체를 뛰어넘고자 하는 '신사회운동적' 문제의식 자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 필자는 노무현 정부 이후 중장기적인 국가변화에 대응하여 사회운동이 직면하는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1) '비정상성'에 대한 저항에서 '정상성'에 대한 저항으로의 전환을 준비하여야 한다.
- (2) 사회운동은 민주개혁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제도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하는 고민을 하여야 한다
- (3) 시민운동은 제도정치의 개혁이 아니라 제도정치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급진민주주의'의 관점을 강화하여야 한다
- (4) 세계화와 대결하는 '해방적 국제주의'의 관점에서 사회운동의 과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 (5) 새로운 저항담론으로서의 공공성담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 (6)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발전주의 혹은 성장주의 자체를 극복해야 한다
- (7) 언론을 '권력기관'에서 '보도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범시민사회의 연대가 필요하다.
- (8) 민주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기조를 막기 위한 시민운동과 중운동의 연대가 더욱 중요해진다.

(9)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노동정치세력이 '선거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운동은 사회 내에 존재하는 새로운 문제들을 인간애적 감수성을 가지고 파악하고 그것을 시민사회의 개혁의제화하고 나아가 그러한 의제들을 국가 및 정당에 강제하는 집단적 힘을 조직화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역설적으로 사회운동의 제기하는 이슈들은 언제나 국가, 정당 등 정치적 주체들과 여타의 사회적 주체들에 의해 실현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제들이 실현되어 가면서 사회운동은 새로운 의제를 찾아 전진할 것을 요구받게 된다고 할 수 있다. 87년 이후 한국사회운동도 자신들의 희생적·헌신적 투쟁을 통하여 한국사회의 개혁을 성취하여 냈고 바로 그성취를 통하여 자신은 새로운 과제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변화를 개발독재적 예외국가의 정상화와 그에 따른 제도화의 도전, 민주화의 이면에서 추진되는 경제적 자유화의 모순 등으로 정식화하고자 하였다. 많은 토론이 있기를 기대한다.

<전체토론1> 한국사회의 변화와 성격

발제2

16대 대선과 시민사회의 과제

정대희(전국교수노동조합 조직실장, 상지대)

1. 대선의 역사적 의미

대선을 계기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과거의 반공규율사회에서 민주사회로, 냉전분단의 사회에서 탈냉전의 사회로 전환될 것이라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양김으로 대표되던 제1기 민주화 단계에서 제2기 민주화 단계로, 즉 포스트 양김의 시대로 전환될 것이라는 사실에도 동의하고 있다. 그 만큼 대선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크고 무겁다는 뜻이다.

2002년 대선에서 우리는 한국 민주화의 세 가지 경로를 둘러싼 역사적 투쟁을 목격한 바 있다. 세 가지 경로란 권영길과 민주노동당이 주도한 진보적 정치의 길, 노무현과 민주당과 개혁국민당 및 노사모가 공동으로 주도한 민주개혁적 정치의 길, 그리고 이회창과 한나라당이 주도한 수구보수정치 길이다. 이 세 가지 경로를 둘러싼 치열한 각축에서 국내외적인 힘의 열세를 극복하고 노무현의 민주개혁정치의 길이 승리를 거두었다. 이것은 아주 특이한 경험이며 획기적인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선은 역사적 진보를 추구하는 세력과 역사적 퇴보를 도모하는 세력을 중심으로 한 전체 사회적 각축 속에서 진행된 선거이자, 그것이 80년대 이후 민주화와 개혁의 역사적 전환점을 형성한 선거라는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우리 사회는 80년 광주항쟁과 87년 6월항쟁의 힘을 바탕으로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민주화를 추진해왔고, 수많은 불만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문민정부의 탈군사화와 국민의 정부의 사회경제적 개혁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양김정권의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민주화세력에 대한 평가가 실추되고 민주화와 개혁이 범수구세력에 의해 포위된 상황에서 선거가 전개되었다.

대선을 계기로 한국사회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21세기의 한국사회가 당면할 새로운 현실은 미지수지만 선거과정에서 변화의 많은 조짐들이 나타났다. 이 변화는 기존의 상식을 파괴하고 기존의 낡은 패러다임을 부정하는 대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대전환, 특히 정치적 대전환의 관점에서 대선을 평가하고 대선 이후의 상황을 전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선거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석이 진행되었고 대부분 익히 알려진 사실이므로 과감하게 생략하고자 한다.

2. 선거 결과의 역사적 의미

우리 사회에서 대선 결과가 갖는 의미는 크게 세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앞서도 언급한 한국 민주화의 관점에서 본 의미이다. 선거 결과는 민주화의 안정적 지속을 요구하는 국민적 의사를 확인하고 결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90년대 이후 추상적 보수주의로 위장한 군사독재의 잔재와 수구·기득권세력의 정치적 재기를 차단하고 민주화 과정을 지속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양김정권으로 불리는 민주화의 제1기를 마무리하고 제2기인 포스트 양김시대로 진입하게 되었다. 동시에 앞으로 자유민주주의가 더욱 폭넓게 실현됨으로써 진보정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개혁의 차원에서 본 의미이다. 선거 과정과 결과는 낡고 구태의연한 정치방식이 퇴조하고 새로운 정치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었다. 퇴조하는 낡은 정치에는 지역주의, 이념공방, 흑색선전, 금권과 관권, 그리고 이 모든 방식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군중동원과 대규모 유세형 대결 등이다. 특히 군중중동원 유세대결에서 미디어를 수단으로 한 정책대결로 전격적으로 전환한 것은 특징적인 변화이다.

그 뿐만 아니라 대선은 우리 정치가 정당 본위의 폐쇄적 정치에서 국민 본위의 개방적 정치로 이행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과거의 선거는 모두 정당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지난 선거에서는 정당과 국민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함께 참여한 선거였다. 이 현상은 특히 노무현 후보 진영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종래의 기계제 대공업식 선거방식에서 전자·정보화 방식으로 선거가 전환되었다. 과거의 신문지 선거가 인터넷 선거로 전환된 것도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정치가 수직적 위계형 구조에서 수평적 네트워크형 참여구조로 전환될 것임을 예고한다.

특히 대선 결과가 단순한 정권교체에 머문 것이 아니라 정권교체와 더불어 정치주체의 교체, 즉 세대교체가 동시에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세대교체라 하든 주류의 퇴장이라고 하든 단순한 교체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 지난 15년간의 민주화 과정에서 지연된 개혁 과제의 지속과 완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재벌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 행정개혁 등이 우선 순위로 언급된다.

세 번째는 정권교체의 관점에서 본 의미이다. 선거 결과는 해방 후 현대한국정치에서 제4기의 '새로운 정치세력'(new generation)이 등장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제1기 세력은 40-50년대에 등장한 지주·친일파그룹이고, 제2기 세력은 60년대에 등장한 군부그룹이며, 제3기 세력은 군부그룹에 대한 반대를 통해 90년대에 등장한 양김씨 등 구민주화그룹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노무현정권은 제4기 세력의 등장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것을 구민주화그룹과 구별해서 신민주화그룹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제4기 정치세력의 등장은 정권교체의 방식에서도 차이가 난다. 우리는 87년 이후 네 번의

정권교체를 경험했다. 각각의 정권교체는 독특한 유형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 87년 대선의 전두환에서 노태우로의 정권교체는 군사정권, 즉 하나회 안에서의 정권교체이자 민정당의 정권 재창출이라 할 수 있다. 92년 대선의 노태우에서 김영삼으로의 정권교체는 민자당 안에서의 정권교체라는 점에서는 형식상 앞의 유형과 유사하지만 군사정권에서 민간정권으로의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질적인 차이를 보여준다. 탈군사화를 실현한 정권교체라는 의미이다. 97년 대선의 김영삼에서 김대중으로의 정권교체는 최초로 정당 바깥의 정권교체, 즉 정당간 수평적 정권교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더구나 탈군사화 이후에 민간세력에서 또 다른 민간세력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짐으로써 문민화가 제도화되고 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정치주체의 변동과 정권교체의 전개과정

1945	1961	1981	1988	1993	1998	2003
제1기 주체 (친일파그룹)	제2기 주체 (군부그룹)		제3기 주체 (구민주화그룹)		제4기 주체 (신민주화그룹)	
이승만정권	구군부	신 군 부		문민정부	국민의정부	노무현정권
		전두환정권	노태우정권	김영삼정권	김대중정권	노무현정권
		▲	▲	▲	▲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앞의 세 가지 유형의 정권교체와 비교할 때 2002년 대선의 김대중에서 노무현으로의 정권교체는 형식적으로는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민주당 단독의 정권 재창출이 아니라는 점에서 독특하다. 노무현의 당선에는 민주당 외에도 노사모와 개혁적 국민정당, 그리고 수많은 젊은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점에서 정당 내외를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한 상황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정권교체를 통해서 3김씨 등 구민주화세력이 정치적으로 퇴장하고 새로운 젊은 정치세력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네 번째의 정권교체는 낡은 사고와 낡은 정치에 물들지 않은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민간민주세력의 집권으로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낡은 정치세력의 퇴장을 예고한다고 볼 수 있다.

선거 결과를 정치사회학적으로 혹은 역사사회학적으로 해석하면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난다. 선거과정과 선거의 동력을 분석해보면 노무현의 승리는 김대중정권의 승리도 아니고 민주당의 승리도 아닌 것이 명백하다. 오히려 변화와 개혁세대의 승리이자 그것을 추구한 젊은 세대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즉 집권을 추구한 정당의 승리이기보다는 민주화와 개혁을 열망한 국민의 승리라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다. 동시에 이 선거는 이회창과 한나라당의 공동의 패배로 나타났지만, 그런 측면보다는 보수주의로 위장한 80년대 이후 군사독재세력과 수구기득권세력의 또 한 번의 패배라는 역사사회학적 의미가 더욱 강하게 부각된다. 이들은 92년 김영삼의 승리로 민자당 내에서 정당 내부적으로 패배하면서 변화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97년 김대중의 승리로 정치적으로 패배하면서 변화의 확산을 알렸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노무현의 승리를 통해 이번에는 국민적 패배 혹은 역사적 패배를 강요당한 셈이다. 따라서 역사적 관점에서는 노무현의 승리와 수구세력의 패배는 80년대 이후 진행되어온 변화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대선의 쟁점에 대한 평가

지난 대선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쟁점들이 제기되었다. 부패문제, 병역비리, 북한 핵문제 등 많은 쟁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학문적 의미를 갖는 중요한 쟁점은 노무현의 승리 요인, 대선의 대립구도, 투표율 해석, 지역주의 등 네 가지라 할 수 있다.

1) 노무현의 승리 요인

노무현의 승리 요인을 한 마디로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게다가 국민경선이라는 제도가 실시되지 않았더라면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도 사실에 가깝다. 이런 점에서 노무현을 후보로 등장시킨 요인은 후보로서의 노무현 자신, 제도로써의 국민경선, 그리고 경선과정에서 노무현을 적극 지지한 노사모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후보로서의 노무현 자신이라는 후보 요인은 지역감정 극복을 위해 부산에서 실패를 거듭한 정치가로서의 신념과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동시에 대선에서 노무현이 승리한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따라서 이러한 승리 요인들을 역사적 배경, 정치적 배경, 전략적 측면에서 검토해보자.

노무현의 승리는 일정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87년 6월항쟁의 동력을 바탕으로 양김정권이 군사정권을 대체했지만 지난 십년간 양김정권의 한계가 반복적으로 드러났고, 이러한 양김정권의 한계에 대한 대응의 관점에서 노무현의 승리를 찾을 수 있다. 앞에서 양김정권을 제1기 민주화 국면이라고 규정한 것처럼 국민들은 양김식 낡은 정치를 타파하고, 양김시대에 들어 더욱 심화된 지역감정을 극복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면서 국민통합을 이를 새로운 지도자를 요구했던 것이다. 즉 제2기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분출되었고, 이것이 정치세력 교체의 흐름으로 나타난 것이다.

구조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일정한 정치사회적 배경이 승리에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말한 국민경선의 도입 외에도 지역주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지역주의를 억제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결과 한나라당의 호남고립화 전략을 극복하고 지지기반을 영남과 충청으로 확대할 수 있었다.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선거의 대립구도가 개혁과 수구의 대립구도로 형성된 것도 노무현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했다. 미디어선거가 강조되고 인터넷의 역할이 크게 부각됨으로써 선거자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수구언론의 무차별적인 공세를 막아낼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젊은 세대가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하

였다.

마지막으로, 전략적 관점에서 국민통합, 낮은 정치 청산, 균형사회 실현 등 긍정적인 메시지를 제시함으로써 상대후보와 크게 대비되었다. 젊은 유권자 세대와 결합을 적극적으로 시도한 것도 크게 효과를 보았다. 젊은 유권자들에게 익숙한 인터넷을 활용하여 수구언론의 영향력을 차단한 것도 중요하다. 대선에서 인터넷은 대안적인 매체로서 뿐만 아니라 흑색선전의 방어기제로서, 그리고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신속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다목적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 막바지 국면에서 후보단일화를 실현함으로써 승리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때 노무현의 승리는 정치인 노무현의 특성이 국민경선, 인터넷, 20-40대 젊은 유권자와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이를 바탕으로 막바지에 후보단일화를 이루면서 얻어낸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역동적인 결합은 또한 지역감정, 색깔론, 북한 핵문제 등 잠재력인 파괴력을 갖는 요인들의 등장을 억제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노무현의 승리에는 외형상 우연적 요소들이 다양하게 개입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연성의 발현을 가능하게 한 역사적 필연성이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으며, 이 필연성은 최근의 급격한 사회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대선에서 노무현은 이 변화의 흐름과 함께 한 것이고 이회창은 변화의 제물이 된 것이다.

2) 선거대립구도의 성격

대선에서는 개혁-수구의 대립구도, 지역주의적 대립구도, 세대간 대립구도 등 세 가지 대립구도가 중첩되어 나타났다. 여기서 개혁-수구의 대립구도가 나머지 대립구도 압도했으며 세대간 대립구도는 개혁-수구의 대립구도와 동일 축에서 형성되었다.

그러나 젊은 세대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특히 선거가 끝난 후 언론에서 이른바 '세대혁명'이나 '세대정치'를 강조하면서 대립구도의 특성에 대한 해석에 혼선이 발생하게 되었다. 대선 국면에서 드러난 대립구도, 즉 지역대결구도와 이념구도를 압도한 세대간 차이를 개혁과 수구의 대립구도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세대간 대립구도로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대선에서 세대간 차이가 강하게 드러난 것은 사실이지만 세대혁명, 세대간 대립구도, 세대정치 등으로 해석하는 것은 대립구도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래 표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세대간 차이는 과거에도 나타났던 것이다. 다만 이번에는 과거보다 조금 심화된 형태로 나타났을 뿐이다. 더 중요한 것은 세대간 차이의 핵심이 정책성향을 중심으로 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외형적으로 드러난 세대정치의 내용은 개혁 그 자체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에서 세대정치가 강조된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존재한다. 우선, 역대 선거보다 세대간 대결구도가 상대적으로 심화되었다. 게다가 지역대결구도나 색깔론

제15대 대선 연령별 투표성향(한겨레신문 조사결과)

연령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	권영길/기타
20대 초반	30.0	38.6	27.1	4.3
20대 후반	27.8	48.1	21.3	2.8
30대 초반	29.5	42.0	26.1	2.3
30대 후반	38.7	43.0	16.1	2.2
40대 초반	35.1	44.6	20.3	-
40대 후반	50.8	36.1	13.1	-
50대	49.5	31.3	19.2	-
60대 이상	53.0	38.6	8.4	-

정대화, 「제15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실증적 연구」, 『동향과전망』, 제37호 등 다른 압도적인 대립요인이 소멸되면서 세대정치가 더욱 부각되었다. 더욱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노사모, 붉은 악마, 촛불시위 등을 통해서 젊은 세대의 적극적인 역할이 크게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유권자로서 한 표를 행사하는 단순 참여자가 아니라 다른 유권자들의 참여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적극적인 참여형 유권자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인터넷을 통해 흑색선전을 차단하고 투표를 독려한 일, 부채자투표를 홍보한 일, 정몽준의 노무현 지지철회 선언에 대해 방어막을 형성한 일 등은 젊은 인터넷 세대의 특징적인 역할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대선은 막연하고 무원칙한 세대간 대결이 아니라 젊은 세대가 중심이 된 개혁과 수구의 대결이라는 설명이어야 하며, 이것이 대선의 본질에 근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붉은 악마의 거리응원에 열광적으로 참여한 20대 유권자들의 절반 이상이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세대혁명'의 한계를 입증하는 것이다. 또한 대선은 30대와 40대 초반이 상황을 주도하고 20대가 추종한 양상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80년대 민주화 세대의 축제"라는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대선에서 나타난 세대간 갈등 혹은 젊은 유권자들의 참여는 새로운 사회적 흐름의 등장이라기보다는 "지연된 민주화에 대한 민주화 세대의 저항의 표출"이라는 해석이 타당성을 얻고 있다.

3) 투표율과 득표율 해석

대선에서는 총유권자 34,991,963명중 24,784,963명이 투표하여 투표율 70.8%를 기록하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의 78.1%가 가장 높았던 반면 충남의 66%가 가장 낮은 투표율로 나타났다. 특히 아래 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87년 대선 이후 투표율의 경향적 하락 현상에도 불구하고 97년 대선의 투표율이 92년 대선에 비해 불과 0.7% 정도 하락했던 것에 비해 대선에서는 직전 선거에 비해 무려 9.9%나 하락하는 큰 변화를 보였다.

따라서 상당한 국민적 관심과 젊은 유권자들의 참여운동에도 불구하고 9.9%나 되는 투표율 하락의 원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나는, 선거날 직전에 이루어진 정몽준의 노무현

에 대한 지지철회가 정몽준 지지자들을 이회창 지지로 유도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 기권으로 유도함으로써 투표율 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또 하나는, 일부 조사에 의하면 전체 유권자의 24%를 차지하는 20대의 투표율이 47.5%로 지극히 낮았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20대의 젊은 유권자들이 적극적 참여파와 탈정치화된 무관심파로 이분화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말하자면 노사모와 같은 정치적 참여파, 붉은 악마와 같은 비정치적 참여파의 구분이 가능한 것이다.

여기서 선거 직전에 이루어진 정몽준의 지지철회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선거일 직전에 지지철회가 이루어짐으로써 지지후보를 전환하는 데 필요한 시간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다음날 오전에 투표를 한 유권자들의 약 1/4 정도만 밤중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뿐 대부분은 사실 자체를 모른 채 투표장으로 갔다고 한다. 게다가 알았다고 하더라도 지지후보를 교체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마땅한 대안을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87년 대선 이후 투표율의 경향적 하락

연 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총선거	지방선거
1987년	89.2		
1988년		75.8	
1991년			
1992년	81.4	71.9	
1995년			68.4
1996년		63.9	
1997년	80.7		
1998년			52.6
2000년		57.2	
2002년	70.8		48.9
평균투표율	80.5	67.2	56.6
투표율 하락폭	6.1	6.2	9.8

다음으로, 정몽준의 지지철회가 이회창에 대한 지지 선언으로 해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직자들의 집요한 번복 요구에 이은 66명의 집단탈당으로 인해 지지철회가 정몽준 개인의 비합리적인 선택으로 축소 해석되었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잠재적인 정몽준 지지자들은 이회창 지지로 이동하지 않고 후보단일화 이후 상황에 맞추어 노무현을 지지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차라리 기권해버리는 선택을 한 것이다. 여기서 투표율 하락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후보단일화로 얻은 노무현의 지지율에 심각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은데다가 정몽준의 지지철회에 자극받은 일부 권영길 지지자들이 노무현 지지로 이동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이탈의 공백을 메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겨레 조사에 의하면 권영길 지지자의 약 10% 가량이 노무현 지지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권영길의 득표수가 957,148명이니 약 10만 명 정도가 노무현으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관계자

들은 더 많은 지지자들이 노무현으로 이동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4) 지역주의에 대한 해석문제

대선의 득표구조는 호남 고립화의 90년 3당합당체제를 극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60년대의 여촌야도나 여동야서를 연상케하는 동서분할의 득표구조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극복의 의미는 제한적이다. 특히 투표결과 뚜렷한 지역주의적 성격이 드러났고, 영호남에서의 지역주의적 투표경향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이것은 선거전략으로서의 지역전략이 공개적으로 동원되지 않더라도 투표결과가 지역주의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고, 지역주의의 퇴조를 강조하는 경향이 부각되는 것은 사실이며,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지역주의의 이분화된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의가 쟁점화되었던 초기에는 지역주의가 선거전략과 직접 결부되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는 지역주의가 지역 유권자들의 마음속에 내면화되고 지역에 뿌리를 내린 구조화된 지역주의로서 의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지역주의의 구조화 혹은 구조화된 지역주의라고 한다면 그 반대는 선거전략으로서의 지역주의이다. 여기서 선거전략으로서의 지역주의는 뚜렷하게 퇴조 경향을 보이는 반면 구조화된 지역주의는 의연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구조적 지역주의에도 불구하고 충청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 지역주의적 투표경향이 약화되었다는 사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다른 측면에서는 지역주의를 배척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정치권에서 지역주의적 득표 전략을 공개적으로 표방하지 못하는 상황이 조성되었다는 점이나 시민단체와 언론, 학계 등에서 반지역주의적 캠페인을 강하게 표방하고 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 적어도 사회적 차원에서는 공공연하게 지역감정을 유발하거나 의존하는 행위를 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역주의에 대한 경험적 의식이 없고 지역주의를 반대하는 젊은 유권자들이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주의의 퇴조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3김시대의 소멸에 따라 '인격화된 지역주의' 역시 자연스럽게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역주의의 전부를 지도자와 결부시킬 수는 없겠지만 지역주의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지역과 지도자의 일체감이 형성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김영삼과 부마항쟁, 김대중과 광주항쟁, 김종필과 충청도 핫바지론 등이 그러한 사례가 된다. 따라서 3김씨의 퇴장이 지역주의의 소멸을 보장하지는 못하지만 약화의 방향으로 작용할 것임은 분명하다.

다만, 퇴조 경향에도 불구하고 호남에서 나타난 노무현의 몰표 현상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의 대립구도에서 95%에 육박하는 몰표 현상을 지역주의 외에 달리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김대중 대통령이 지도한 민주당이 호남당이고 노무현 후

보가 민주당의 후보라는 점에서 이 설명은 타당하다. 그러나 대선이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노무현의 승리인 것처럼 호남의 지지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보다는 노무현에 대한 지지의 성격이 훨씬 강하다. 따라서 영남 출신 후보를 호남 유권자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한 것을 지역감정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형용모순이 될 수 있다.

선거전략의 측면에서도 몰표 현상을 해석할 수 있다.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는 선거국면이 형성되기 이전부터 반호남-반김대중 전략을 바탕으로 지지기반을 구축하는 네거티브 캠페인을 강하게 추진했다. 말하자면 “김대중을 때리면 표가 나온다”는 지역주의 전략에 의존한 것이다. 폭로정국이나 게이트 등 부패스캔들 활용이나 도청사건 폭로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호남의 몰표 현상은 한나라당의 선거전략에 대한 호남 유권자들의 자구적 대응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노무현이 몰표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회창이 몰표를 가져다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해석이다. 마지막으로, 정몽준의 지지철회 파동 역시 부분적으로 호남 표의 결집에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4. 노무현정부에 대한 전망

노무현정부의 등장 혹은 그것을 가능하게 한 대선 결과는 “상식의 파괴”나 “기존 패러다임의 변경”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정치관계를 분석하는 기존의 틀로 국내외적인 관계를 분석할 경우 “노무현의 승리”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었다. 유일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국민적 지지와 인터넷, 그것뿐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유일한 장점이 노무현을 승리로 이끈 것이다. “상식의 파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런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대선과 그 이후의 상황을 “세대혁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시민사회의 반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6월항쟁의 계승” 혹은 “6월항쟁의 완성”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분단체제와 냉전체제의 해체” 과정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다. 기존의 정상적인 분석틀로는 설명되지 않는 드라마와 같은 결과가 나왔으니 이러한 표현이 결코 틀린 말은 아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과거의 국민 배제적 정치상황에서 벗어나 국민참여를 실현하고 국민의 의사를 정치와 행정에서 실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노무현정부는 해방 후 정치사에서 출몰했던 민간독재, 군사독재, 양김의 권위적 민주화를 넘어 순수 민간민주정부 구성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정부는 합리성, 개방성, 다원성, 참여지향성, 균형성이라는 민간민주정부의 다섯 가지 특성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현실화하려고 노력하는 정부이기도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노무현정부는 한국 민주화의 관점에서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장과 제도화 혹은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심화발전의 책무를 부여받은 정권으로서의 역사적 위상을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보정치적 맥락에서 제기되는 쟁점은 제외하더라도 민주주의의 관점

에서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쟁점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제도화하는 정권의 위상을 갖게 된다는 뜻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노무현정부는 보수 일변도의 정치가 진보정치로 이행하는 ‘가교정권’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이 방향을 크게 국민통합의 실현, 낮은 정치의 청산, 형평과 균형의 정치라는 세 가지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민주주의와 정치영역으로 좁혀서 표현한다면 제2기 민주화 국면을 주도해 나가는 정권으로서 민주당의 혁명적 개혁과 전체 정치구조의 혁신을 바탕으로 노무현식의 ‘새로운 민주주의’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는 국민이 주인되는 정치, 부패없는 깨끗한 정치,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 국민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열린 정치, 절차와 제도가 존중되는 정치 등 그간 학계와 국민들이 요구해온 방향을 지향할 것이며, 이의 실현을 위해서 권력분산과 삼권분립의 정착, 반부패개혁, 정당개혁, 정당명부제 등 선거제도 개혁이 추진될 것이다.

한편, 정치적 관계는 사회적 관계를 반영하면서 또한 사회적 관계를 재편하기도 한다. 노무현정부의 출범은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이로 인해 사회적 세력관계를 재편하는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지난 대선의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개혁적 보수세력이 사회의 중심세력으로 정착하게 되는 이른바 “주류의 교체” 혹은 “중심세력의 이동”을 촉발한 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개혁적 보수세력을 정치의 중심에 놓고 왼쪽에 진보세력, 오른쪽에 수구보수세력을 두고 3자가 권력을 향해 경합하는 초기 단계의 이념적 3정립구도를 형성하게 된다.

이 경쟁관계에서 진보세력의 일정한 약진과 수구세력의 상당한 퇴조가 예상되며, 그 결과로서 미래의 정치지형은 보수(conservative), 자유(개혁, liberal), 진보(progressive)의 안정적인 3정립구도로 이행하게 되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며, 이러한 단계를 거쳐 진보세력이 정치적으로 정착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우리가 대선과 그 이후의 상황을 “정치적 대전환”(political ‘great transformation’)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대전환이든 개혁이든, 역사의 진전이 백지 위에 그려지는 그림은 아니다. “개혁세력을 어떻게 튼튼하게 결집하며 수구세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압하느냐” 하는 문제는 모든 민주정부, 모든 개혁정부가 숙명적으로 맞닥뜨리는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최대의 난제이다. 개혁주체의 구축이 전제되지 않는 개혁은 연목구어에 불과하고 대통령 일인의 의지에 기반한 개혁은 오래 가지 못하는 법이다. 우리는 이 교훈을 양김정권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배웠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개혁지향적인 노무현정부는 선거과정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과분하게 받은 행복한 정권인 동시에 국정운영 과정에서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약한 정권일 수도 있는 정치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상식의 파괴”를 배경으로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노무현정부는 젊은 국민들의 정치적 지지를 제외한다면 튼튼한 권력기반이나 효과적인 정치적 지렛대를 가지고 있지 못한 약한 정부라고 해야 할 것이다. 호전적인 미국과의 관계를 중심

으로 한 국제정치관계, 재벌과 기득권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국내의 사회경제적인 관계, 수구 언론의 독과점체제 하에 있는 언론과의 관계,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는 정치권의 관계, 개혁되어야 할 민주당내 관계 등 어느 것 하나 노무현정부에게 유리한 것이 없다.

따라서 선거과정과 국정운영의 불일치성 때문에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대선에서의 승리가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조성되었다.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한 2004년 총선이 끝나고 제17대 국회가 구성되는 2004년 6월까지는 현실적으로 법·제도적 개혁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다만, 한나라당이 정당개혁을 추진하고 그 결과로서 노무현정부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거나, 아니면 개혁을 반대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상황이 형성되지 않는 한 노무현정부는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게다가 2004년 총선에서 민주당(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을 승계할 새로운 신당)의 승리를 낙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아야 한다.

때문에 노무현정부로서는 법·제도적 개혁보다 현행 법체계 하에서 국정의 '준법운영'과 인사개혁을 통해 최대한의 변화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개혁과제를 통치 차원의 개혁(대통령과 청와대 주도), 정치 차원의 개혁(민주당 주도), 행정 차원의 개혁(총리와 행정부 주도)으로 유형화할 경우 법·제도적 개혁 못지 않게 현행 법체계 안에서 개혁의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고,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중 실현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개혁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따라서 반부패와 정치개혁 등 국민적 합의기반이 튼튼한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정치권의 논란이나 국민적 논란이 예상되는 분야는 일단 우선 순위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과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 법·제도 개혁뿐만 아니라 모든 개혁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초기에는 야당과의 합의정신을 살려 개혁을 추진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정치권의 최대한의 변화를 통해서 낡은 정치구조를 청산함으로써 낡은 정치가 국정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새로운 정치의 기반을 구축하는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과 관련, 민주당의 혁명적 변화를 통해 한나라당의 "최대치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런 점에서 민주당의 개혁은 노무현정부와 민주당 모두에게 절실한 과제라 할 수 있다.

5. 시민사회의 역할 : 정치세력화에 대한 모색

노무현정부의 개혁성은 시민사회의 요구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시민운동의 관점에서 노무현정부가 시민적 지지기반을 크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정부는 김대중정부와 비교해서 시민사회에 한 걸음 더 친숙하게 다가선 정부일 수밖에

에 없다는 점 때문에 시민사회는 노무현정부를 통해서 지연된 개혁과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정부는 국민의 폭발적인 힘으로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정치 및 사회경제의 구조화된 힘의 잠재적 저항에 직면해 있는 약한 정부이다. 게다가 선거과정에서 조직화되지 않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기대수준이 한껏 고조되어 있는 반면 중층적인 한계로 인해 실행력이나 성취도는 상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시적으로 분출되는 국민들의 비조직화된 지지와 항구적으로 작동되는 기득권세력의 제도적인 힘 사이의 괴리는 개혁의 지속을 불가능하게 하는 일차적인 장애물이 된다. 또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와 낮은 실행력 사이의 간극은 국정운영의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바로 이 두 가지 모순 때문에 노무현정부는 개혁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국정운영에서 원칙적으로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국민적 지지를 극대화하는 '국민참여형 국정운영' 전략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동시에 시민사회의 지지를 극대화하고자 할 것이다. 노무현 당선자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국민참여센터'를 개설하고 새 정부의 청와대에 '국민참여수석'을 신설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참여형 국정운영'의 일환이다. 게다가 시민사회의 지지를 극대화한다는 것은 시민운동단체의 지지를 얻는다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이것은 노무현정부가 노동계와는 최대한의 갈등억제 정책을, 시민운동과는 적극적인 협력정책을 국정운영의 전략으로 설정할 것임을 시사해준다.

노무현정부가 국민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한 일이다.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민운동과 협력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시민운동의 성격상 원칙적으로 정부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인위적인 거리 두기" 그 자체를 강조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오히려 감시와 견제, 협력과 비판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옳은 태도가 아닐까 한다. 다만 노무현정부가 국민참여를 임기 내내 지속할 수 있느냐, 국민참여를 제도화할 수 있느냐, 국민참여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방적이고 유연한 정부체제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관점을 바꾸어서 정부의 개혁에 대해 시민운동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은 노무현정부의 관점에서 정당일 뿐 시민운동 혹은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반드시 정당한 것은 아니다. 시민사회나 시민운동은 정부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본질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 뿐만 아니라 정권의 임기보다 훨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내다보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로서는 대선과 대선 이후의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설정 속에서 선택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상황인식과 관련, 우리 사회의 역사적 단계가 장기간의 국민 배제적 정치에서 국민정치의 시대를 거쳐 미래의 계급정치로 나아가는 과도기에 들어서 있으며, 노무현정부의 출범은 진정한 국민정치 시대의 개막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정치는 국민이 참여하는 정치, 국민이 주

체가 되는 정치, 국민의 뜻이 관철되는 정치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이 정치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고 국민이 주체의 관점에서 참여한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선거가 진행된 방식 및 노무현 후보가 승리한 요인은 그대로 국민정치의 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권과 정당이 국민정치를 실행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게다가 최근 추진중인 개혁을 통해서 국민정치에 적합하도록 정치권과 정당이 체질개선을 할 수 있는지 본질적인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측면에서, 우리의 정치는 계급정치가 발현될 수 있을 정도로 발전된 자본주의적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에 준하는 객관적인 계급관계를 구현하고 있다. 게다가 일정한 계급혼련을 통해 계급의식을 형성한 노동자계급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확인되는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은 정치영역에서 대부분 보수적으로 굴절되어 버리고 만다. 많은 노동자들은 진보 대신 개혁을 선호할 뿐만 아니라 상당수 노동자들은 거리낌없이 수구와 보수에 몸을 의탁하기도 한다. 분단과 냉전과 지역주의의 정치상황이 계급상황을 압도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비롯되는 분단과 지역의 이데올로기가 계급의식을 압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인 만큼 정치적 상황과 계급관계를 분리 차단할 수 있는 상황 설정이 필요해진다. 이것은 역사적 의미를 갖는 정치적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를 보수정당, 지역주의 정당이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라면 민주노동당이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역사의 현 단계에서, 그리고 80년대 한국 민주화의 현 단계에서 이 과제를 담당할 수 있는 사회적 범주는 6월항쟁으로 본격적으로 확장되고 활성화되기 시작한 시민사회라 할 수 있다. 오직 시민사회만이 국민 배제적 정치를 국민정치 혹은 국민참여정치로 전환할 수 있고, 계급의식에 대한 정치적 상황의 압도적인 규정력을 차단함으로써 계급정치가 발전하는 길을 열어 나갈 수 있다. 이 과제는 노무현정부도 수행할 수 없는 과제일 뿐만 아니라 보수적이고 지역주의적이고 과도적인 현재의 정치권에 기대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이것을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 혹은 정치적 진출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시민사회가 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사회만이 유일하게 분단과 냉전의 이데올로기적 억압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위치에 있다. 둘째, 시민사회는 지역주의를 거부하며 탈지역주의의 열망에 가득차 있다. 셋째, 시민사회는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있다. 넷째, 시민사회는 다양한 영역의 공존을 통해 상당한 전문성과 정책능력을 함양하고 있다. 다섯째, 시민사회는 80년대 민주화 이후 가장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우리 사회의 중추적인 영역이다. 여섯째, 시민사회는 아직까지도 유일하게 정치적 원시림으로 남아 있다.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는 역사적인 맥락에서도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앞의 표에서 언급한 것처럼 역사적으로 볼 때 40년대와 50년대는 지주세력 및 이와 결합한 친일파들이 정치세력화한 시대라 할 수 있다. 지주계급의 정치세력화는 미군정에 의한 좌파 붕괴에 힘입은 것이기도 하다. 60년대 이후 30년간은 한국전쟁을 통해 급격하게 성장한 군부세력의 정치세력화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그리고 사회경제세력이 군부세력을 압도한 시점인 80년대 중반

이후에 단계적으로 병영으로 퇴진했다. 80년대 이후에는 산업화에 따라 성장한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가 추진되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분적인 방법으로 독점자본가계급의 일 분파에 의해 재벌의 정치세력화가 추진되기도 했지만 동일한 정치적 상황의 규정력에 의해 실패하고 말았다.

이렇게 볼 때 역사적 맥락에서나, 사회적 세력관계의 맥락에서 정치세력화의 마지막 원천은 시민사회라 할 수 있으며, 우리 정치는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를 통해서 과거와는 질적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서 "과거와 질적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정치"란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가르는 경계와 장벽이 허물어진, 그리하여 정치와 시민사회가 상호 유통하고 의사소통하는, 그 결과로서 정치가 시민사회에 기반하고 시민사회가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정치를 말한다. 이 '새로운 정치'는 민정당에서부터 시작한 수구냉전적인 한나라당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며, 민주당의 개혁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민주당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정치와 정당에 대한 인식과 운영원리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자전거에 엔진을 장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자전거를 자동차로 개조할 수는 없는 일이며, 설령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개조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시민사회가 정치세력화 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하나는 기존 정당과의 협력을 통해서 정치세력화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정당과 구별되는 정치방식을 추구하거나 혹은 새로운 정당의 건설을 통해서 추진하는 방법이다. 원칙적으로 이 두 가지 방법이 모두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대중적인 진보정당을 추구하는 민주노동당이나 지난 대선 기간에 창당된 개혁적 국민정당이나 대선 이후 상당한 각오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이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라는 관점에서 상호협력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각 정당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민주당은 두 차례의 집권 경험을 축적한 대중적인 개혁적 보수정당이다. 그러나 두 차례의 집권은 모두 민주당의 지지기반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특성에 의한 것이었다. 게다가 민주당의 하부는 지극히 취약하다. 민주당은 과거 당쇄신 과정을 거쳐 상당한 개혁을 이루었지만 그것은 상층개혁에 불과한 것이었다. 게다가 지난 95년 김대중의 정계복귀 과정에서 통합민주당에서 새정치국민회의로 분리 창당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호남당'으로 출발함으로써 아직까지도 호남당의 색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시민사회가 암묵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새로운 정당'이라는 개념에서 평가한다면 민주당의 운영원리는 '새로운 정당'에 부합하는 참여형 구조나 참여형 당원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시민사회와 민주당의 상호협력 가능성이 위해서는 민주당이 '새로운 정당'의 개념에 가깝게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설령 민주당을 해체하고 재창당을 하더라도 민주당을 '새로운 정당'으로 바꾸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정치권에서 축적된 경험과 인식이 '새로운 사고'를 근본적으로 방해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민주노동당은 '새로운 정당'에 가깝다. 민주노동당은 이념적으로도

새로울 뿐만 아니라 정당의 운영원리 역시 기존 정당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민주적인 원리를 체현하고 있다. 철저한 진성당원 체제나 아래로부터의 참여와 결정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민주노동당이 '노동자성'을 뚜렷하게 표방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노동자성'을 강하게 체현하고 있는 그 만큼 시민사회와 거리감을 가지고 있다. 말하자면 미래사회의 대안적 영역인 역동적인 시민사회를 정치적으로 포섭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본질적인 한계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산업화 과정에서 급속하게 도시화되었다. 인구비중으로 본다면 도시와 농촌의 구별이 무의미할 정도로 과잉 도시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구성은 '도시정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민주노동당은 앞으로 노동자 밀집지구에서 전략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노동자 밀집지구가 아닌 대다수의 도시에서 대체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대안을 갖지 못하고 있다. 도시화된 사회에서 '도시정치'(city politics)의 대안을 갖지 못한 것은 결정적인 취약점일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민주노동당은 "도시화된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도시정치'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시민사회와 협력할 수 있을 만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시민사회가 민주노동당의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한편, 대선 과정에서 젊은 유권자들로 구성된 '개혁적 국민정당'이 창당되었다. 개혁국민정당은 정강정책은 민주당의 것을, 운영원리는 민주노동당의 것을 취하는 특이한 방법으로 창당했으며 선거에서는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대선 이후 개혁국민정당은 민주당과 경쟁하는 지속성을 가진 정당으로 거듭날 것임을 강조하면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 개혁국민정당의 창당과정이 조급하고 이념과 정책이 조잡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당의 운영원리는 매우 민주적이며 정당에 참여하는 당원들의 충실도와 의식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은 다른 정당들과 대비되는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는 시민사회의 지향에 매우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개혁국민정당이 책임있는 정당 혹은 정치세력으로서 계속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현실적으로 개혁국민정당 안에서도 민주당과의 통합을 수용하는 의견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 역시 개혁과정에서 개혁국민정당을 일차적인 통합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개혁국민정당은 창당과정이나 당원 구성의 특성상 정당으로서의 지속 가능성을 검증받지 못한 상태이다. 이런 점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의 가능성을 충분히 열려 있지만 구체적인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시민사회가 특정 정당과의 협력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노동당과 개혁국민정당은 내부적으로 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민주당은 강력한 인적 청산의 요구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반대로 한나라당은 수구보수의 정당이지만 내부적으로 개혁적인 인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각 정당에 산재되어 있는 개혁적인 요소들이 시민사회와 정치세력화의 틀을 형성하는 것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고려할 수 있다. 기존 정당의 틀을 깨거나 정당을 벗어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더 큰 변화의 힘이 작용하면 그다지 어려운 문제도 아니다. 이 방식은 87년 6월항쟁 이후 김영삼과 김대중으로 분리 견인되었던 민주세력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으며, 민주화 운동사의 관점에서는 6월항쟁 세대의 재결집이라는 측면도 갖게 되므로 약간의 역사적 의미를 갖는 것이기도 하다.

시민사회가 정치세력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가능성 및 각각의 가능성이 가진 장점과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능한 대안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는 독자적인 방식으로 정치세력화를 추진하고, 그 후에 연대나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때 시민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정치세력화의 방법에는 정당이나 비정당적 정치세력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장벽을 허무는 국민정치를 지향하는 상황에서 정당을 회피하거나 부정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본다.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와 관련해서 검토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는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이다. 현재 시민운동은 상징적으로 시민사회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를 언급하면서 시민운동을 제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말하자면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는 시민운동의 정치세력화로 읽힐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두 가지 이해가 필요하다. 하나는, 시민운동은 시민사회의 일부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시민사회는 시민운동을 포함해서 매우 역동적인 넓은 영역을 포괄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는 이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라는 뜻이다. 그렇다고 시민운동을 배제한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를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또 하나는, 시민운동 역시 이미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분화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념적인 분화가 정치적인 분화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시민운동의 정치적 분화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일부 수구 정당이나 수구 언론이 강조하는 것처럼 시민사회나 시민운동은 정치의 무풍지대나 중립지대가 아니며, 시민운동이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켜야 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 해외의 시민운동의 사례를 보더라도 시민운동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은 수구세력이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시민운동의 정치적 선택은 시민운동의 당연한 권리이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다음 두 가지 사항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시민운동의 중립성 문제가 근거없는 신화라고 하더라도 일정하게 국민적 인식 속에 각인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시민운동이 전문화되고 이념적, 정치적으로 분화되는 과정에서 권력감시를 핵심적인 영역으로 하는 시민운동의 경우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중립성을 철저히 견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시민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권력감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만큼 이것은 최소한의 필요성이다. 또 하나는,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가 기존 정당으로의 영입을 통합 '출세'가 아니라 새로운 정치의 '개혁'이라는 사회운동적 관점에서 인식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 자체가 국민적 지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시민운동에 대한 인식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검토해볼 문제는 우리의 경우는 서구의 녹색당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성격이 있다는 사실이다. 서구의 경우 제도화된 절차적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진보적인 가치가 보수적인 가치와 각축하는 상황에서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이 대변하지 못하는 공간을 정치적으로 점거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인 정치적 제도화 자체가 미흡한 상황인데다 진보적인 정치 자체가 이제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상황에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는 녹색당식 정치세력화가 아니라 시민사회의 전체 역량을 결집한 정치세력화가 필요한 것이다.

6. 맺음말

대선 결과는 정치사회적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노무현정부는 많은 한계 속에서도 과거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정치를 시도할 것이다. 냉전과 분단의 논리가 탈냉전과 평화와 통일의 논리로 대체되고, 차별과 독점과 소외의 논리가 형평과 분배와 공존의 논리로 대체될 것이다. 분단과 지역주의에 편승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던 세력은 이제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교체에 따른 행정부의 변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변화에 대한 전망은 그다지 밝은 편이 아니다. 민주당에서 약간의 변화를 감지한다면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에서는 어떤 변화도 감지하기 어렵다. 설령 한나라당에서 일정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한나라당을 '새로운 정당'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며, 노무현 당선자가 한나라당 당사를 방문한다고 해서 '새로운 정치'가 시작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시민사회가 정치적 방관자나 감시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정치적 참여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선에서 노무현의 당선은 새로운 정치적 주체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식 정치를 뒷받침하거나, 그것을 정치영역에서 비판하고 견제할 정치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노무현이 국정운영에서 국민정치의 시대를 개막한다면 정치영역에서 국민정치의 시대를 열어가갈 정치세력은 아직 형성되지 못했다. 이 경우 시민사회가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선 이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이다. 우리 사회에서 누가 국민정치를 주도할 것인가, 누가 국민정치를 진보정치로 이끌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발제3

진보정치운동의 과제와 전망

-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노회진(민주노동당 사무총장)

들어가며

2000년 2월 출범한 민주노동당은 제 16대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창당 3년만에 제 3당의 위치를 확보하는 약진을 이뤄내었다. 민주노동당 창당 이전 10여년에 걸친 진보정당운동의 실패와 좌절을 상기해 볼 때 괄목할 만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근로대중의 정당으로, 대중적인 진보정당으로 완전히 정립하였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 선뜻 긍정적인 진단을 내리기 힘든 것 역시 사실이다.

민주노동당이 제 3당의 지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은 아직 만들어가고 있는 당이다. 창당 3년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은 아직 당건설기를 완전히 경과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무엇보다도 민주노동당은 계급정당으로서, 이념정당으로서 그리고 대중정당으로서 자신의 성격과 지향을 분명히 해야하는 과제에 봉착해 있다. 동시에 민주노동당은 부르주아민주주의의 진전에 따른 대중적 참여열기를 정치발전의 새로운 에너지를 수렴해야 하는 조직적, 정치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민주노동당의 창당 전야를 반추하며 현시기의 과제와 방향을 모색해 본다.

1. 민주노동당 창당추진 원칙

(1) 창당추진 5대 원칙

① 노동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당 건설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려는 진보정당에서 노동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세계 진보정당운동의 역사가 입증하는 보편적인 원칙이다. 그리고 이 원칙은 선형적인 규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참여를 통해 실현시켜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특히 경제위기의 일차적인 피해자로 다수의 노동자가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근로대중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가 진보정당 건설과 운영에 적극 나서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진보정당 건설의 제 1의 원칙이자 지상과제이다. 따라서 일선 현장에서, 단위노조 내부로부터 진보정당건설의 논

의가 전개되고 창당의지가 확산되는 것이 당연한 과제이다.

② 투쟁 속에서 건설하고 대중 속에서 성장하는 정당 건설

진보정당은 경직된 관념으로 대중의 지지를 호소하지 않는다. 우리는 재력과 명망으로 대중에게 영합하려는 보수정치의 행태를 배격한다. 진보정당은 오직 투쟁으로, 대중 속에서의 활동으로 자신을 알려나가고 지지와 참여를 실현시켜야 한다. 특히 정리해고와 무분별한 구조조정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이 집중되는 99년 상반기에 창당을 하는 의미는 바로 투쟁 속에서 당을 건설하고 창당을 무기로 노동자 투쟁의 지평을 넓히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진보정당은 의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보수정당과 자신을 분명하게 구분시킨다. 진보정당의 일상활동은 의회라는 좁은 공간보다 대중이 살아 숨쉬는 민중의 바다, 고통의 현장에서 민중과 더불어 투쟁하고 활동하는 대중노선을 실현한다.

③ 밑으로부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전체 당원들의 총의로 운영되는 정당 건설

우리가 만드는 진보정당은 명망가의 정당이 아니며 당 관료의 조직도 아니다. 오직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선 당원이 주인이다. 민주주의는 진보정당의 활동과 운영의 최고 규범이다. 그리고 이 규범은 당을 건설하는 과정에서부터 철저히 관철되어야 한다. 따라서 당명과 주요 정당정책 등 정치노선은 물론 조직노선과 활동방식에 대해서도 모든 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논의 속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특히 창당과정에서 어떤 당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 일선 당원들의 생각과 의지가 밑으로부터 상향식으로 조기될 때야 만이 지금 건설되는 진보정당의 밝은 미래를 기약하는 것이다.

④ 폭넓은 민주진보세력의 참여와 단결을 원동력으로 하는 정당 건설

진보정당은 이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을 열망하는 모든 민주진보세력과 개인에게 자신의 문호를 완전히 개방한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원칙이 견지되는 한, 이념과 정책상의 다양성은 조직을 오히려 강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다. 소수의 견해가 존중되면서 다수의 견해가 집행되는 실질적인 민주주의는 진보정당만이 실현시킬 수 있는 원칙이다. 따라서 폭넓은 민주진보세력들의 참여와 단결을 도모하는 것은 창당 사업시기는 물론 창당한 이후에서 추진되고, 견지되어야 원칙이다.

⑤ 국가경영을 책임질 대안정당, 정책정당 건설

진보정당은 단순한 정치단체가 아니라 집권을 목표로 하는 권력대안이다. 동시에 진보정당은 일회적인 선거를 위한 기구가 아니라 전체 민중과 운명을 함께 하는 항상적인 조직이다. 따라서 진보정당이 국가경영을 책임질 총체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일상적인

국가시책 전반에 대해 진보적인 대안을 수립하고 제시하는 것은 필수적인 활동내용이다. 진보정당은 한국정치를 퇴행시켜온 일체의 지연, 학연 등 구시대적 연고를 배격한다. 우리는 진보정당은 진보적인 이념과 정책대안으로 지지를 조직할 것이며 대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성장해갈 것이다.

2. 민주노동당 창당을 둘러싼 주객관적 조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진보정당 창당을 위한 노력은 기본적으로 1987년 6월항쟁 이후의 정세 즉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진전과 노동운동의 고양이라는 호조건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 바로 이 점에서 1997년 이후의 진보정당 창당사업은 1988년의 민중의 당, 한겨레민주당, 1990년의 민중당을 잇는 새로운 시도이기도 하다. 한국의 진보세력들이 1987년 이래 정치세력화에 실패한 것은 여러 요인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그러나 보다 핵심적인 요인은 주체형성 상의 문제, 지지기반 특히 노동운동의 문제, 정치적 환경 등의 문제로부터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세가지 측면에서 과거 진보정당운동의 실패요인을 지금 얼마나 극복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은 민주노동당이 처한 주객관적 조건을 진단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1) 주체형성의 문제

1987년 이래 민중당에 이르기까지 진보정당운동은 무엇보다도 창당의 주체세력을 형성하는데 실패하였으며 이로 인한 후유증은 당이 해산되는 순간까지 당활동의 근본적인 장애가 되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1987년 이후 반정부운동 내의 진보블럭은 정치세력화문제를 둘러싸고 이른바 독자정당파와 민주연합파로 크게 양분되었다. 교조적 사회주의분파와 트로츠키파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미미한 존재였다. 독자정당파와 민주연합파의 분열과 대립은 우선 6월항쟁 이후의 정세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부터 비롯되었다. 물론 이러한 정세인식의 차이는 보다 깊은 연원-한국자본주의와 정치권력, 북한정권 등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의 차이-을 갖는 것이었다.

독자정당파는 6월항쟁과 군부통치세력의 퇴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갈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리고 이는 성장하는 한국 자본주의의 요구이기도 하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 대 반민주의 대립구도는 사실상 와해되었으며 민주주의와 반독재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과거의 반정부운동은 목표를 수정하여 이미 진행되고 있는 민주주의적 개혁의 폭과 속도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대립구도를 형성시켜가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정세인식에는 민주주의적 개혁에 있어서 보수야당의 역할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평가가 첨가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보다 많은 민주주의, 보다 빠른 속도의 개혁을 위해 집권 여당만이 아니라 민주적인 야당과도 대립하고 경쟁하는 진보정당의 건설을 필수적인 과제로 제기하였다.

반면 민주연합과는 군부통치세력의 퇴각을 일시적이며 기만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정세가 보다 복잡해졌을 뿐 민주 대 반민주의 대립구도는 여전히 유효하며 제 민주세력의 연합은 계속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보수야당은 여전히 중요한 파트너였다. 보수야당의 상대적 진보성은 높게 평가되었으며 보수야당의 집권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발전의 가능성을 얻게 된다고 보았다. 당연히 이들에게 보수야당과 결별하고 독자적인 정당을 건설하는 것은 힘의 분산이며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었다. 더구나 진보정당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정치상황에서 대중적 지지를 얻기 힘들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같은 정세인식의 차이로 인해 독자정당과가 진보정당의 창당을 준비하는 동안 민주연합과는 보수야당에 입당하였다. 1987년 이후 치러진 두차례의 대통령선거와 두차례의 국회의원선거 그리고 한차례의 지방의회선거에서 독자정당과는 진보정당 혹은 무소속 독자후보를 출마시켰고 민주연합과는 이들의 경쟁자인 보수야당을 지지하였다. 반독재투쟁의 핵심세력이며 오랜 동지였던 진보블력의 분열은 진보정당건설을 추진하던 세력의 약화를 가져왔다. 자연히 이들은 한국에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반정부운동을 정치적으로 대표할 수 없었으며 헌신적인 반독재투쟁으로 획득한 도덕적 권위도 독점할 수 없었다.

이처럼 민중당등 1987년 이래의 진보정당운동에 큰 장애를 조성하였던 주체형성의 문제는 민중당이 이미 해산된 1992년 제 14대 대선 이후 점진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여 1997년 제 15대 대선을 전후하여 전혀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1997년 대선을 앞두고 결성된 국민승리21은 이러한 변화의 상징이었다. 초기 국민승리21의 주요 참여세력은 민주노총, 전국연합, 진보정치연합이었다. 따라서 국민승리21은 바로 민주연합과와 독자정당과의 오랜 대립과 분열의 해소를 의미하는 상징물이었으며 동시에 민주노총이라는 조직노동자들이 정치세력화에 본격적으로 참가하는 큰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제 15대 대선 이후 국민승리21을 구성하였던 좌우세력의 양극단에서 부분적인 이탈이 있었지만 제 15대 대선의 결과 DJ가 당선됨으로써 1987년 이래의 주체형성상의 문제는 일단락 되었다. 민주연합과의 주축이었던 민족주의 운동계열은 다양하게 분화되어 일부는 진보정당운동으로, 다른 일부는 친정부조직과 관변단체로 진출하였으며 한총련, 범민련 등 민족주의계열의 완고파들은 전국연합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비록 민족주의 완고파들의 진보정당에 대한 태도가 유보적이긴 하나 이들은 진보정당추진세력과 함께 DJ정부의 반민중적 정책에 반대하는 공동전선을 결성하고 있다. 이로써 1987년 이래 정치세력화를 둘러싼 민주 진보진영의 내분 상당한 정도로 해소되었으며 진보정당운동은 무거운 짐의 하나를 덜게 되었다.

민주진보진영의 내부에서 정치세력화를 둘러싼 극단적인 대립이 현저히 완화된 것은 그 자체로써 진보정당 창당의 조건이 개선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으로 주체형성상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과거의 문제는 일단락 되었지만 새로운 차원의 다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그 하나는 바로 1992년 대선을 전후하여 나타난 진보적 시민운동과의 관계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민주노총의 참가로 본격화되고 있는 노동운동 내부 노선갈등의 문제이다. 이 두 가지 문제는 비생산적 대립과 정치적 갈등으로 일관된 과거의 문제와는 차원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 즉 새롭게 대두되는 주체형성상의 문제는 바로 당의 성격과 발전전략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2) 노동운동의 문제

1987년 대파업투쟁으로 시작된 노동운동의 고양은 진보정당운동에 미친 긍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1987년 이후의 진보정당운동이 고양기를 구가하던 노동운동과 노동자대중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고는 전혀 말할 수 없다. 반대로 이 시기의 진보정당운동은 노동자들을 자신의 조직적 기반으로 모아내는데 실패하였다는 것이 정확한 평가이다.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하층계급의 정당을 표방한 진보정당이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1987년에서 1992년에 이르기까지 진보정당운동에 참가한 주축세력은 노동자들이었다. 실제 민중당 지구당위원장 중 절반 이상이 노동조합운동 출신이었고 1992년의 한국노동당 창당준비위에는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전체 중앙위원 중 절반이 참가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진보정당은 전노협, 업종회의, 현총련, 각 지역 노동조합협의회 등 조직노동자들의 공식적인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일부에서 거론하듯이 이들 정당들의 구성과 노선이 '노동자 중심'이 아니어서인가? 이미 위에서 예시한 구성의 문제를 보나 당 강령과 주요 정강정책 및 활동내용을 평가해 보더라도 민중당 등의 진보정당이 비(非)노동자적 혹은 탈(脫)노동자적 정당이라 말할 수 없다. 오히려 문제는 이들 진보정당이 노동운동 내의 한 분파로 치부되면서 정치적 노동운동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 결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동시에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당시의 민주노조운동이 아직 정치적 태도를 일치시키고 행동을 조직할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대규모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단위 기업의 노동쟁의에서 비합법투쟁을 불사하며 정권과 일대 격돌하는 초강경의 투쟁 노선을 견지하던 민주노조들이 보다 온건하고, 합법적인 선거국면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정하지도 못한다거나(92년 대선), 대량구속과 해고는 물론 식칼테러까지 자행한 기업주의 후보를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지지한다거나(92년 총선) 하는 현상이 벌어진 것은 준비부족으로 밖에 설명될 수 없다.

물론 노동운동의 준비부족에는 당시 노동운동을 지배하였던 경제주의적 편향과 기업별체제라는 구조적인 요인을 무시할 수 없다. 수십 년에 걸친 독재통치하에서 한국의 노동자들은 노동조합결성이나 임금인상을 위한 파업의 권리를 사실상 박탈 당해 왔다. 노동자들의 어떠한 단체행동도 경찰의 물리적인 탄압에 직면해야 했다. 이런 과정에서 물리적 억압에

전투적으로 저항하는 노동운동의 전통이 자리잡아 왔다. 그러나 노동운동에 대해 적대적인 '전투적 자본주의'라는 외적요인은 내적요인 즉 노동운동과 노동자 의식의 발전은 전투적인 경제투쟁과정에서 이뤄지며 따라서 경제투쟁에 집중해야 한다는 경제주의적 활동노선과 결합하면서 기업단위로, 개별 자본가와와의 경제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운동을 지배적인 노선으로 표출시켰다. 그 결과 한국의 노동자들은 아직 경제투쟁에 보다 많은 에너지를 집중해야 하며 '정치'는 시기상조라는 인식이 팽배하였다.

다음의 요인으로 기업별 노동조합체제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들 수 있다. 세계적으로 일본 이외에 유례를 찾기 힘든 기업별체제는 노동통제 방식의 하나로 도입된 것으로서 노동자들의 단결과 단체행동과 노동자의식을 개별 기업 내에 가두는 효과를 발생시켰다. 결국 기업별 체제 하에서 노동운동은 개별 사업주와의 경제적인 갈등을 해소하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제한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특히 당시의 노동조합운동은 제조업, 사무전문직, 재벌그룹 별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업종별 단결을 준비하는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막강한 동원력을 가진 재벌그룹 대기업노조들의 경제투쟁이 전체 노동운동을 주도하였으며, 기업내부의, 자신과 직접 관련된, 경제적인 이해관계에만 자신의 강력한 조직력을 행사하는데 익숙해져 있었던 대기업노조들의 활동노선은 노동운동의 경제주의적 편향에 의해 합리화 되었다. 경제주의적 편향은 기업별체제라는 비옥한 토양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1987년 이후 외형적으로 볼 때 급속도로 성장하고 활성화된 한국의 노동운동은 운동의 발전단계에 맞게 자신의 활동과 영향력을 사회전반과 정치영역으로까지 확장시키지 못한 채 개별기업 내에서의 경제투쟁에만 매몰되는 기형적인 성장을 거듭해온 것이다.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선거에 조직적 참여를 포기하고 오히려 선거가 개별기업의 임금인상투쟁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킬 것을 우려하는 노동운동은 당시의 진보정당운동이 당면한 두 번째 장애물이었다.

1995년 민주노총이 건설되면서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은 산업, 업종별 재편을 완료하였다. 동시에 민주노총과 각 연맹을 중심으로 새롭게 전개된 노동운동은 전국 혹은 산업단위로 사회적, 정치적 과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기업별체제가 갖는 개별적이고 분산된 경제투쟁 중심의 활동의 문제점은 부분적이거나 해소되기 시작하였다.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노총이 자신의 조직 대표자를 대선 후보로 추대하고 본격적인 정치활동에 나선 것은 조직노동자들의 정치적 태도변화를 나타내기엔 충분한 것이었다. 더욱이 민주노총의 대선 참가는 진보정당 건설을 직접적인 목표로 하는 것인 만큼 새롭게 건설되는 진보정당은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3) 정치제도의 문제

이제까지 진보정당운동이 직면한 또 하나의 곤란은 법적, 제도적 장애로부터 비롯된 것

이다. 이념과 정치적 신조를 문제삼는 국가보안법은 그 존재 자체가 진보정당의 정치활동에 제약을 가져왔다.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와 정치자금 기부금지는 진보정당의 조직기반과 재정확보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도 했다. 최근 이러한 제도적 장애가 다소 완화된 것은 사실이다. 특히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이 보장된 효과는 98년 지방선거에서 분명히 드러난 바 있다. 정치자금 기부금지 조항도 머잖아 개정될 전망이다. 반면 국가보안법은 현정부 들어서서 적용의 경직성이 다소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없다. 그러나 이들 문제보다도 더욱 심각한 것은 바로 선거제도에 있다. 지역주의와 금권선거운동이 지배하는 선거풍토에서 현행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는 진보세력과 신진인사들의 정치적 진출을 가로막는 장벽이었다.

선거제도는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소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개선되는 것이 관건이다. 일본식 비례대표제로 가더라도 진입장벽을 최대한 낮추고, 권역별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집계하며, 비례대표제 적용비율을 1:1 정도로 높이 지 않는다면 결코 현행제도보다 낫다고 할 수 없다.

3. 현시기 민주노동당의 과제

- (1) 계급정당으로의 정립
- (2) 이념정당으로의 정립
- (3) 대중정당으로의 정립
- (4) 새로운 정당문화의 창출
- (5) 여성, 환경문제와 진보정당

<전체토론1> 한국사회의 변화와 성격

토론

우리시대의 시대정신과 사회운동진영의 과제

정대연(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정책위원장)

1. 2002년 대선의 시대적 의미- 자주와 진보시대로의 이행

2002년 대선의 시대적 의미는 무엇인가?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는 2002년 대선에서 표출된 민심-민중의 지향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문제이고 둘째는 대선 이후 한국사회 발전의 지향점이 어디로 모아질 것인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1) 2002년 대선에서 나타난 민심의 지향

이번 대선에서 표출된 민심은 무엇이었는가?

그 첫 번째는 민족자주의 지향이다.

이번 대선이 그 이전의 다른 대선과 질적으로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은 민족자주의식이 거대하게 표출되었으며 이 것이 선거에서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1) 지금까지 한국의 대선에서 '한미동맹관계' 즉 종속적이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는 불가침의 성역으로 되었으며 후보들은 앞다투어 자신이야말로 미국에게 가장 호감을 받는 후보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 애썼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후보들마다 누가 당당하게 사과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가를 놓고 다투는 형국으로 전개되었다. 이회창은 '소과개정'과 '부시사과'를 요구하는 '승부수'를 띄웠으나 그 결과는 수구세력 내부의 자중지란만을 불러 온 '정치적 자해행위'가 되고 말았다. 이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제2의 6월항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촛불시위'가 만든 힘이다.

주목할 것은 87년 6월 민주화대항쟁이 박종철열사의 고문치사사건으로 촉발되었지만 수십 년에 걸친 민주화투쟁으로 축적된 반독재 민주주의의 표출이듯 '촛불시위' 또한 미군에 의한 두 여중생사망과 무죄평결로 촉발되었지만 수십 년에 걸친 반미자주화투쟁으로 축적된 민족자주의식이 표출이라는 점이다. 이번 반미시위는 가깝게만 보더라도 노근리 사건, 매항리 사건, 미국의 아프간 침공, 악의 축 발언, 오노 사건, 부시 방한 반대투쟁 등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벌어진 대중적인 민족자주권 회복운동과 자주화의식의 발전에 토대를 두고 있다.

결론적으로 폭압적인 독재체제에 저항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했던 대중의 지향이 87

1) 반미시위와 SOFA 개정 요구가 대통령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매우 영향이 클 것'이라는 응답과 '다소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응답을 합쳐 65.3%가 대선에 미칠 반미시위의 영향력을 인정했다.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거나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모두 26.8%였다.(문화일보 2002. 12.12)

년 6월민주화대항쟁으로 터져 나왔다면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청산하고 자주권을 되찾고자하는 열망은 '2002년 자주화대항쟁'으로 터져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대선에서 강하게 표출된 민심의 두 번째 지향점은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의 지향이다. 이번 대선의 두 번째 특징은 역대선거 때마다 선거결과에 결정적 미쳤던 이른 바 '색깔론'이 전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대선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미국의 북한선박 소산 호 나포사건과 북한의 핵동결해제선언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으나 한나라당은 이 '호재'를 전혀 활용할 수 없었다.2) 그 반대로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북핵문제의 일괄타결', '부유세 신설', '재벌해체' 등 민주노동당의 '급진적 주장'은 '친북' 또는 '좌경시비'에 휘말리려는 커녕 '차별성'과 '선명성'으로 평가받으며 대중적 호응을 얻었다. 참으로 격세지감이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역대선거는 수구세력이 일방적인 색깔공세를 퍼붓고 '개혁세력'은 수세적인 대응에 급급한 양상이었다면 이번 대선에서는 화해나 대결이나, 전쟁이나 평화냐는 대결구도가 명확히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회창과 한나라당이 '시대착오적인 냉전세력'으로 공격당하는 양상이 벌어졌다.

이러한 민족자주의식의 고양과 민족화해 평화통일 의식의 확산은 상호 맞물리면서 상승발전하고 있다. '6.15남북공동선언'으로 열린 남북화해 분위기는 반세기 넘게 이 땅을 지배해 왔던 반공반북 이데올로기를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 반공반북 이데올로기의 해체는 곧바로 숭미사대주의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부시정권의 대북적대 공세는 대중들에게 역설적으로 미국이 '진짜 악의 축'이라는 사실을 일깨우는 결과를 가져왔고,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오노사건'을 계기로 '반미감정'은 대중적 정서로 자리잡았다. 여기에 '월드컵 4강 신화'는 뿌리깊은 '민족적 패배주의'를 날려 버렸고, 두 여중생 살인범에 대한 미군재판의 무죄평결은 '민족적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반미감정'에 불을 질러 놓았다.

이번 대선에서 표출된 민심의 세 번째 흐름은 새정치에 대한 열망이다.

이번대선에서 한나라당은 '부패정권심판론'을 민주당은 '새로운 정치실현'을 민주노동당은 '진보정치'를 표방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새로운 정치'가 승리하고 '진보정치'는 약진했다. '부패원조당'이라고 할 수 있는 한나라당이 부패한 정치인이라고는 할 수 없는 노무현에 대해 '부패정권심판론'을 들고 나온 것 자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국민들은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보수회귀를 거부하고 '개혁의 지속'을 선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국민들이 선택한 것은 '개혁의 지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이 선택한 개혁은 '정치자제'를 바꾸는 것이었다. 그러면 '정치자제'를 바꾸는 것, 즉 '새로운 정치'는 무엇을 말하는가? 필자는 이것이 '대중주체의 정치'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심판한 것은 '3김 정치'로 불리는 낡은 정치이다. '3김 정치'의 폐해는 '지역주의정치', '부패정치' 등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그 반민중적 본질은 1인중심의 보스정치, 파벌정치를

2) 화물선 나포가 한국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젊은 층일수록 높았다. 20대의 경우 63.0%, 30대 55.5%, 40대 53.2%, 50대 이상 41.6%였다.(문화일보 2002. 12. 12)

통해 민중을 정치의 구경꾼, 통치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다는 점이다.

이번 대선에서 이러한 '넓은 정치'는 더 이상 '주류'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실증되었다. 그것은 광범위한 대중이 '정치의 구경꾼', '통치의 대상'으로 앉아 있기를 거부하고 '정치의 주체'로 등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민주당내에서 확고부동한 것처럼 보이던 '이인제 대세론'이 허무하게 무너진 것은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하더라도 '국민경선'이라는 방식을 통해 대중의 역동적인 '정치참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대중의 이러한 역동적 정치참여는 민주당내의 '동교동계'로 대표되는 파벌정치세력을 무력화시킨 데 이어 이회창마저 거꾸러뜨리는 놀라운 위력을 발휘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자민련 등에서 이탈한 '정치철새'들을 영입하는 데 상당한 공을 들였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다. '철새정치인'의 지역구에서 대패를 한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후보와 몇몇 정치인들, 그리고 그들이 '고용한 운동원'들이 선거를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지나고 수십 수백만 명의 광범위한 대중이 선거운동에 직접 나서는 새로운 정치문화가 창조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80년 이후 지속적으로 축적된 우리 사회 민주역량의 발현이다. 동원식 가두정치가 축소되고 인터넷이 중요한 '정치공간'으로 등장하면서 대중은 정치의 구경꾼, 일방적인 선전대상에서 벗어나 자기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상호소통하면서 정치적 지향을 '조직화'하는 단계까지 나갈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한 것이다.

2) '민주에서 자주로' '개혁에서 진보로'

이번 대선의 이러한 특징은 87년 6월항쟁부터 시작한 우리 사회의 변화가 이제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음을 말해 준다. 이는 '제2기 민주화' 단계로의 이행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는 않다고 본다.

필자는 이를 '민주화 단계에서 자주화 단계로의 이행', '개혁에서 진보로의 이행'이라고 규정하고 싶다.

김대중정부 아래서의 이른 바 '민주개혁'이 진전되지 않고 정체하거나, 퇴보하기까지 한 것은 크게 보아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김대중정부가 갖고 있는 대미 의존성이다. 잘 아는 것처럼 김대중정부는 'IMF'에 굴복하면서 초국적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신자유주의세계화 정책으로 일관하였다. 그 결과 비정규직의 양산, 부익부 빈익빈의 확대, 사회적 공공성의 후퇴, 노동3권의 약화 등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심화시켰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표방하였지만, 다수의 민중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적 공공성을 해체시키는 가운데 민주주의의 진전이란 지극히 외형적인 것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충분히 검증되었다. 더욱이 김대중정부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은 한국경제를 미국중심의 초국적 자본이 진행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깊숙이 편입시킴으로써 한국사회의 대외종속성을 더욱 구조화했다. 역대정권에 비해 역사적인 공헌으로 평가받는 남북 화해협력정책도 한미공조라는 이름의 대미굴종적 정책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 부시정권의 극단적인 대북

적대정책으로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조성되는 상황에서 민족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것을 제약하는 요소로 고스란히 작용하고 있다.

김대중정부는 정경유착이라는 이름의 부패구조의 고리를 끊어내는 데도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이를 확대 재생산하였다. 이는 정권담당자들의 도덕성 문제만이 아니다. 신자유주의 정책기조 속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구호아래 각종규제는 완화되거나 철폐되었으며, 향락산업이 대대적으로 육성되었다. 아울러 천문학적인 액수의 공적 자금이 조성되고 투입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권력핵심부가 관련된 부정과 부패는 확대재생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김대중정부의 개혁이 정체하거나 실패한 이유 가운데 또 하나는 강력한 개혁주체를 형성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김대중정부의 출범자체가 지역주의 연합, 그 것도 유신잔당과의 연합으로부터 시작했다는 태생적 한계도 있지만 보다 더 큰 문제는 8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 강력히 축적된 사회적 민주역량을 결집하고 동원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사실 김대중정부의 출범은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정부로의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대중의 힘이 주된 동력이었고 JP와의 연합은 부차적이었다. 그러나 김대중정부는 출범이후 DJP연합과 이를 통한 '보수세력 꺼안기'에 치우침으로써 주된 동력을 상실하는 오류를 범하였다.³⁾ 김대중정부는 대중의 힘에 의해 정권이라는 칼자루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제대로 휘둘러 보지 못하고 집권5년 내내 보수세력이라는 칼날을 잡고 씨름하다 끝났다고 비유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김대중정부의 실패는 자주성을 갖지 못한 정권, 대중의 힘을 동원하지 못하는 정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실증해 주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반세기이상 분단된 상황에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외세(미국)에 철저히 종속되어 있으며, 이것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사회진보를 가로막는 일차적이고 결정인 장애이기 때문이다. 이 강력히 구조화된 외세주도의 분단지배질서의 해체는 대중의 강력한 힘을 동원하는 사회적 운동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이다.

이번 대선은 '진보정치'의 가능성을 확인한 역사적 선거였다. 이는 물론 직접적으로는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의 선전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957,148(3.9%)표를 얻었다. 지난 97년 권영길 후보가 국민승리21 후보로 얻은 306,026(1.38%)표에 비하면 약 3배가 된 득표이다. 3.9% 100만표에 가까운 지지자들은 박빙을 다투는 선거판에서 '사표'가 될 줄 뻔히 알면서도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기꺼이 표를 던진 열성지지자들이다.

더구나 민주노동당은 이번 대선에서 3.9% 득표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다. 그 것은 "한국사회에서 진보정당은 안된다"는 뿌리 깊은 패배주의를 날려 버리고 나아가 "미래의 대안은 진보정당이다"라는 인식을 광범위한 대중에게 강하게 심어 준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100만표의 몇 배나 되는 '민심'을 얻은 것이다. 이는 12월 1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잘 나타난다. 70.7%가 민주노동당에 '호감'을 표시하고, 11.8%가 2004년 총선에서는 "민주노동당후보에게 투표하겠

3) 이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가 하는 것은 거세게 불던 '노풍'이 노무현의 김영삼 방문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계기로 급속히 꺾이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다"고 답한 것이다. '수구세력의 집권저지'라는 현실적 이유 때문에 노무현에 투표하지만 정책적으로나 이념적으로는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광범위한 '잠재적 지지자'를 확보한 것이다.

우리 사회는 87년 6월 항쟁이후 근본적인 변화를 향해 달려 왔다. 대중의 높아진 정치의식은 낡은 정치질서를 거부하고 이를 해체시켜왔으나 이를 대체할 새로운 정치세력이 형성되지 못한 '과도기'를 겪어야 했다. 그 결과 정치적 허무주의와 패배주의, 무관심은 위험수위로까지 확산되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중단 없는 투쟁을 통해 진보적 사회역량은 끊임없이 축적되어 왔으며, 대중의 높아진 정치의식과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은 높아져 왔다. 지난 2,000년 4.13총선에서 광범위한 대중의 폭발적 지지를 받았던 '낙천 낙선운동'은 대중의 정치변화에 대한 열망이 계기만 형성되면 놀라운 폭발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낙천낙선운동'의 결정적 한계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8.1%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비로소 그 '대안'은 싹트기 시작했으며, 이번 대선을 통해 진보정당은 '정치적 변화', 미래시대를 이끌어갈 주체세력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필자가 이번 대선을 진보정치시대를 연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단지 민주노동당이 선전했다는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더 본질적으로는 대중이 직접적인 정치의 주체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개혁'과 진보는 대립된 개념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같은 개념도 아니다. 진보는 개혁을 때로 배척하지만 진보는 개혁을 포섭한다. 개혁과 진보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은 무엇일까? 필자는 그 것을 '주체'에서 찾는다. '개혁'도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동력이 작용하지만 대중이 직접적인 주체는 아니다. '진보'는 그 것이 '개혁'과 대비하여 '진보'라는 이름으로 불릴 때는 민중이 직접적인 변화의 담당자-주체로 서서 자신의 힘과 의사에 따라 사회를 자신의 이익에 맞게 개조해 나갈 때 '진보성'을 획득한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참된 의미의 '진보성'을 '변혁성'과 같은 의미로 쓴다.

그런 점에서 민중이 '정치'의 주체인가, 아니면 통치의 대상에 머무는가 하는 것을 '진보정치'를 가르는 근본적 표징으로 본다. 민중이 정치의 주체로 등장하는 첫번째 단계는 감시와 비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를 참여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2000년 4.13총선에서 시민단체들이 주도한 낙천 낙선 운동은 이러한 참여민주주의의 최고형태의 하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의미에서 민중이 '정치'의 주체로 선다는 것은 직접적인 정치의 담당자가 되는 것이다. 이는 '진보정당'으로 나타난다.⁴⁾ 민중이 정치의 주체로 선다는 것의 최고수준은 민중이 권력의 주인이 된다는 것, 즉 집권한다는 것이다.

4) 민중(대중)이 정치의 직접적 담당자가 된다는 것이 진보정당에서만 가능한가? 진정한 의미에서는 그렇다. 최근 보수정당에서 '진성당원제', '아래로부터의 공천' 등을 도입하려는 '정당개혁' 움직임이 있지만 보수정당에서 그 것이 참되게 실현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은 더 이상 보수정당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민중(대중)을 진정한 정치의 주체로 세운다는 것은 단지 참여의 기회를 주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운명과 사회발전의 주인으로 살고자하는 근본적 지향을 근본에서부터 발양시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발전과 사회발전을 억누르는 것을 본성으로 하는 보수정당에서 이 것을 기대하는 것은 우물에서 승능 찾는 것이나 다름없다.

필자가 이번 대선을 진보정치시대의 개막을 연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하는 것은 바로 민중이 정치의 주체로 나서 집권의 의지를 갖고 전진해 나가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다. 이는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하나의 정치 주체로 섰다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넓게는 스스로 조직을 만들고 정치활동을 전개한(예컨대 노사모와 같은) 수많은 대중들도 진보정치의 시대를 열어갈 주체로 본다.

3) 시대정신에 대하여

조희연교수는 권위주의 시대의 시대정신은 '민주주의 회복'으로, 민주화단계에서의 시대정신을 '민중개혁'으로 파악했다.⁵⁾ 별 이견이 없다. 그렇다면 2002년 대선 이후(조희연교수는 이를 포스트민주화-민주주의 2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시대정신이란 한 사회에 있어 그 시대의 발전방향 즉 미래지향성을 갖는 가치의 정수(精髓), 시대의 담당자인 대중(민중)의 최고지향점을 말한다고 할 때 필자는 이를 자주와 진보라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앞으로의 시대는 자주시대-진보시대라고 규정한다.

사실 자주와 진보는 통일되어 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는 사회역사적 측면이다. 현단계 우리사회에서 진보는 무엇일까? 필자는 이 것을 자주화, 민주화, 평화통일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진보는 현상타파 또는 수구반동을 척결한다는 역사적 전진을 의미하는 사회과학적 개념이다. 때문에 진보는 사회역사의 발전정도에 따라 그 내용이 변화발전하며, 어제의 진보가 오늘에는 낡은 것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 봉건체제를 반대하던 신생자본들은 절대왕정체제하에서는 진보였으나, 새로운 임금노동-자본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자본에 의한 인간의 억압과 착취라는 사회관계에서는 새로운 보수세력으로 되었다. 평등과 해방을 앞세운 사상적 조류와 운동들은 항상 낡은 것을 타파하고 새로운 사회관계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여 왔는데, 주로 이것은 생산수단과 정치권력의 소유관계를 경제적 관계 속에서 파악함으로써 진보라는 개념이 주로 계급적 범주안에서의 틀인 것처럼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진보는 보수에 대항하는 계급적 개념으로만 작용하지는 않는다. 진보의 기준을 사적소유의 철폐, 자본주의 착취제도의 일반적인 철폐에 근접한 정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협소한 관점이다. 왜냐하면 진보라는 개념은 경제제도의 변화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안에서 사람의 발전을 가로막는 억압과 차별, 지배를 철폐하고 사람의 발전을 영구적으로 계속 실현해나가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가 존재하는 한 진보라는 정치적 발전의 과정은 영원히 존재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사회관계에는 항상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의 갈등과 투쟁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민족의 자주권이 유린당하고 민중의 권리가 억압당하는 분단식민지사회에서의 자주권의 실

5) 2002년 대통령선거평가토론회자료집 중 조희연 '제2기 민주화' 단계의 구조적 의미와 개혁담론의 방향

현은 민족자주와 통일국가의 수립으로만 출발되고 해결될 수 있다. 민족의 자주권이 없는 나라에서 민중의 권리와 행복이 실현된 역사는 그 어디에도 있지 않다는 것이 바로 우리 역사가 남긴 역사적 교훈이다.

자주와 진보가 통일된 가치라는 것은 철학적 측면에서도 그렇다. 여기서 '자주'라는 가치는 '민족자주'라는 이름으로 말할 때는 나라와 나라사이, 민족과 민족사이에서 억압과 차별이 없이 자기 민족의 의사에 따라 발전해 나가는 것을 말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억압과 차별이 없이 사회성원들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가치지향성을 담고 있다. 이를 정치적인 측면에서 표현하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민중이 정치의 주인으로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자주-진보시대의 정치이념을 필자는 '자주적 민주주의'라고 정의하고 싶다. 이를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만 말하자면 이른 바 '일반민주주의',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민중이 직접적인 정치의 주체로 나서 사회발전을 담당해 나가는 민주주의 단계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2002년 대선 이후 한 시대는 '자주적 민주주의 이념' 아래 자주화, 민주화, 평화통일을 완수하는 단계이며, 그 주체는 '진보세력'이라고 생각한다.

2. 시대정신을 이끌어 갈 주체에 대하여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이를 힘있게 이끌어 갈 주체세력이 마련되지 않으면 시대발전은 지체되거나 때로 퇴보하기까지 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1) 노무현정권은 시대정신의 담당자가 될 수 있는가?

노무현 정권은 '자유주의적 개혁세력'이 주도하는 '친미보수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 노무현의 집권은 대중의 강렬한 개혁과 변화의 요구에 힘입어 이루어졌다는 점, 집권세력 내부의 비주류세력이었던 '자유주의적 개혁세력'이 동교동계로 표현되는 주류세력(자유주의적 친미보수세력)을 누르고 정권을 주도하게 되었다는 점, 선거막판 정몽준의 지지철회로 DJP연합과 같은 반개혁적 권력구조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에서 김대중정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혁성이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노무현 정권이 집권세력내부의 비주류세력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정치기반이 취약하고, 강력한 야당과 미국, 자본의 집중적인 견제 속에서 이러한 개혁성이 어느 정도 발휘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노무현 정권의 이러한 상대적 개혁성은 먼저, 일반민주주의 개혁의 강화로 나타날 것인 바 재벌과 언론, 세제, 정치개혁 등 일반민주주의 개혁을 김대중정권에 비해 상대적 적극성을 갖고 추진할 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서 정치개혁은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대중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을 등에 업고 이른 바 '개혁주체'를 형성함으로써 소수정권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할 목적 아래 집권초기부터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기본적으로 김대중정권의 연장선에 있다. 이는 노무현 정권이 김대중정권의 핵심적 정책기조인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병행발전전략', '신자유주의 세계화정책', '햇볕정책', '한미공조정책' 등을 거의 수정 없이 그대로 승계할 것이라는 점에서 압축적으로 표현된다.

무엇보다도 노무현정권은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인 바, 이는 일반민주주의 개혁조차도 형식적인 것에 그치게 할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정책을 세계적 추세로 적극 수용하되, 재벌개혁과 조세제도의 개혁, 빈부격차의 해소, 사회복지의 확대 등으로 그 부정적 후과를 최소화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유연화, 규제완화 등 자본중심의 정책과 함께 노동3권의 축소, 공공성의 축소와 사회복지의 후퇴 등을 심각하게 불러오는 신자유주의 정책과 민주주의적 개혁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김대중정권 아래서 충분히 검증되었다. 노무현정권 아래서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김대중정권 아래서의 그 것에 비해 차별성을 갖는다면 그것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장애로 되는 전근대적 재벌구조, 무원칙한 공적자금의 투입과 이에 따른 구조적 부정부패 등 천민자본주의적 행태를 극복하기 위한 의지를 상대적으로 강하게 갖고 추진할 것이라는 점 정도이다.

노무현 정권은 김대중정권의 '햇볕정책'을 그대로 승계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문제는 남북관계가 북미관계가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고, 특히 2003년 북미사이에 핵문제를 둘러싼 대결이 첨예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노무현정권이 한미관계를 어느 수준까지 자주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국민 대중 속에 반미 감정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노무현정권은 한미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선명성'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부시정권의 대북정책이 '햇볕정책'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상황으로 나타나는 경우 노무현정권과 부시정권 사이에 부분적인 균열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대미종속성을 탈피하기 어려우며 '한미공조의 강화'를 기본기조로 할 것은 명확관화하다. 이는 최근 노무현당선자가 '촛불시위의 자체'와 '친미자주'를 주장하며, '반미시위'확산에 제동을 거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데서도 잘 나타난다. 미국에 의해 정치군사적으로 철저하게 장악되어 있고 특히 한국경제가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질서에 전면적으로 편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노무현 정권의 한미관계에서의 상대적 '선명성' 또한 '전쟁반대', '절차적 평등성 강화'의 수준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노무현 정권에 그 어떤 것을 기대하는 환상을 갖는 것은 금물이다. 노무현 정권이 가진 상대적 '개혁성'조차도 여러 가지 구조적 한계 속에서 언제든지 후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또한 사회운동진영이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활용되어야 할 측면이지 결코 시혜적으로 주어질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역사의 주인은 민중이다. 역사의 전진은 민중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지 그 어떤 누군가가 선물해 주는 것이 아니다.

2) 진보정당운동의 발전을 위한 사회운동진영의 역할에 대하여

노무현정권의 상대적 개혁성도 강력한 진보정당이 존재할 때 최소한의 역사적 역할을 담 당할 수 있을 것이다. 역으로 노무현정권 5년의 기간은 새로운 진보정당이 새로운 시대를 이 끌어 갈 명실상부한 대안의 정치세력으로 강화발전 되는 기간이어야 한다. 그러하기에 현시 기에 진보정당운동을 강화발전시키는 것은 비단 민주노동당만의 몫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진보 를 바라는 모든 사회운동진영의 공통과제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한국의 사회운동세력은 민주노동당을 우리 사회의 모든 진보적 역량을 담을 수 있는 명실상부한 '진보정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대선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으로 보나 한국정치에서 차지하는 지위로 보 나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위상이 높아졌다. 진보정당운동의 일대전진과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한 단계 전진은 늘 더 높은 수준의 과제와 난관을 던져 준다. 기성정치세력의 견제도 더 커질 것이며, 진보정당운동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질 위 험도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높아진 대중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그 것이 어찌든 지 심판의 칼날이 되어 돌아 올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2004년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 진입을, 2007년에는 집권에 도전할 수 있는 '명 실상부한 대안'으로 선다는 통 큰 목표를 세워야 한다. 높아진 지지율에 안주하여 비례대표 몇 석을 다투거나 당내부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에 안주해서는 결코 대중의 더 큰 지지를 이끌 어 낼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노동자와 농민의 정치적 단합을 실현해야 한다. 진보정당운동의 일대 도약과 전진을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노동자와 농민의 정치적 단합을 실현하는 문제는 사활적 이며 전략적인 과제이다. 민중의 절대다수인 노동자와 농민의 단합을 실현하지 않고서는 진보 정당인 민중의 확고한 정치적 대변자로 설 수 없으며,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치적 대안으로 성 장할 수 없다. 노동자, 농민의 정치적 단합은 그 자체가 그 무슨 이해관계를 따질 문제가 애 당초 아니다.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해내야 할 사활적 과제라는 인식부터 확고히 가져야 한다.

먼저 노동자와 농민은 계급적 이해에서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다. 농민들이 소자산계급이라 는 이유로 변혁성을 낮추어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는 우리 나라 농민들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 분석이다. 굳이 따지고 보면 농민들이 노동자들보다 더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으면 있었지 덜 하지 않다. 한마디로 말해 "세상을 바꾸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는 점에서 노동자와 농민은 같 은 운명체인 것이다. 농민들의 진보정당운동의 참여는 진보정당이 전국적 정당으로 면모를 갖추는데서 필수적이다. 농민들은 지역적 공동체성이 어느 계급 계층보다 강하다. 농민활동가 의 정치적 영향력도 막강하다. '전농'을 중심으로 농민들이 진보정당운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하 게 될 때 비로소 진보정당은 도시와 농촌을 망라한 전국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 수 있다. 아울러 시민사회운동진영 활동가의 진보정당으로의 진출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민중운동세력과 시민사회운동세력이 힘을 합치는 문제는 진보정당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 동안 시민사회운동진영은 '정치적 중립성'에 묶여 자신의 힘을 제도정치공간으로 진입시 키지 못해 왔다. 최고형태가 2000년 4.13총선에서의 낙천낙선운동이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 '민주화단계'에서 시민사회운동이 대중적 압력을 통해 '민주개혁'을 압박하고 촉진하 는 역할을 했다면 시대의 발전에 따라 광범위한 대중이 정치의 주체로 나서고 있는 현시대에 서는 이를 하나로 결속하여 강력한 대안의 정치주체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치적 중립성'은 "부패한 기성정치권으로 진출하여 출세를 탐하는 것"에 대한 대중의 경계를 담고 있는 것이다. '진보정당'에 참여하여 기성정치세력에 대한 강한 비판을 행사하고 대중주체의 정치활 동을 전개한다고 할 때 그 것이 출세주의로 비쳐질까? 시민운동의 도덕성을 훼손할까? 아닐 것이다. 오히려 그 것은 희생과 봉사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진보정당의 이념과 정책에 대한 일치를 보기 위한 노력과 존중하고 협력하기 위한 노력이 비상히 필요할 것이다.

(2) 공동의 정치사회개혁운동을 강력히 전개하자.

국회의원선거 정당명부제, 대선 결선투표제, 18세 선거권부여 등 정치개혁운동을 광범위한 대중의 참여 속에서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3) 인터넷공간을 '대중주체의 정치문화' 꽃피는 공간으로 만들자.

이제 인터넷공간은 가장 위력적인 정치공간으로 탄생했다. 이 공간의 특성은 정보의 공유와 유통이라는 '공동체성'과 '쌍방향성', '직접적인 참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성의 정치공간 에 비해 진보적이다. 또 광범위한 대중이 '차기의 처지에 맞게 참여한다는 점에서, 자발적으로 조직을 만들고 확대재생산한다는 점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든다는 점에서 위력적이다.

사회운동진영이 이 공간에 개입한다고 할 때 대중의 자발성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예컨대 사이버 지방의회, 사이버 국회-궁극적으 로는 사이버 정부를 전국적 네트워크로 구축한다면 매우 위력적인 정치공간으로 될 것이다.

이 공간은 특정 정치세력만이 아니라 모든 세력에게 열려 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정치 적 커뮤니케이션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다.⁶⁾

3) (가칭) '자주·평화 범국민연대'를 구성하여 자주·평화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벌여 나갈 수 있는 태세를 갖추자.

본 자료집 중 <미국의 세계 전략과 한반도 위기의 원인 및 해법> 참조

6) 필자가 아는 범위에서는 현재 사이버여성의회, 사이버청소년의회 등이 운영되고 있고, 지방에서는 사 이버광주시의회가 활동하고 있다.

<전체토론1> 한국사회의 변화와 성격

토론

상생의 정치와 그 의미

정현백(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성균관대)

지난 12월 대선에서 노무현후보의 승리는 한국 사회에서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미 정대화교수가 밝힌 대로 “집권을 추구한 정당의 승리이기보다는 민주화와 개혁을 열망한 국민의 승리”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 선거는 지역주의, 이념 공방, 흑색선전, 금권과 관권 개입, 그리고 대규모 군중동원을 통한 선거운동을 탈피하여, 미디어를 수단으로 한 정책대결로 전환한 것도 괄목할 만한 변화이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세대간 대립이 정책 성향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도 괄목할 만한 현상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 사회는 정대화교수의 지적처럼 양김시대를 넘어 “제2의 민주화시대”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된 것이다. 특히 2002년 12월 선거이후 구민주화그룹의 퇴조도 분명해졌다. 이 구민주화세력은 사실 한독당으로부터의 오랜 역사적 뿌리를 지닌 집단으로써, 그 자체가 민주적 속성을 지녔다고보다는 군부독재세력에 의한 탄압 때문에 반사적으로 민주화세력으로 지칭될 수 있었던 집단이고, 그를 통해 1961년 군사쿠데타 이전의 과거청산작업에서 면죄부를 받을 수 있었던 세력이다. 이제 한국 사회는 본격적인 민주주의 실험의 무대에 서게 되었다.

그러나 노무현후보의 승리는 이미 출발부터 몇 가지 장애 요인을 안고 출발해야 하고, 그래서 한국 사회의 미래는 결코 장밋빛은 아니다.

1. 노무현후보는 겨우 50여만 표의 차이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이는 노무현 정부는 완전히 다른 정보채널과 의사소통망·멘탈리티를 지닌 두 집단의 요구와 비판을 소화해내야 하게 되었다. 특히 낮은 의식수를 지닌 민주당으로서는 여러 정치 사회적 개혁에 있어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아직은 보수수구세력이 12월 대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적극적인 대항을 하지 않고 있어서, 어쩌면 ‘정쟁의 휴지기’라 할 수 있지만, 이들이 본격적으로 공격을 시작할 경우 노무현 정부의 운신 폭은 대단히 축소될 것이다. 이 두 세력을 추스르면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고,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시민사회 역시도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2. 한국 정치에서 항상적으로 작용하는 장애요인은 ‘북한문제’이다. 한국의 민주화나 정치 개혁에 대한 우리의 어떤 대응도 다른 반쪽, 북한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시도하기가

어렵다. 노무현 정부의 초기과제는 북핵 위기로 인해 날카로운 시험대 위에 서 있다. 당장 북핵 위기를 해소하거나 기아와 에너지난으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는 일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바로 이 점이 진보정치로 가는 과정에 암초로 작용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제2의 민주화시대에는 많은 이들이 수구보수정치의 길에서 민주개혁적 정치의 길을 거쳐 진보정치의 길로 이르는 전망을 상정하고 있고, 우리 대다수의 관심은 민주개혁의 과제를 풀어가면서 어떻게 진보정치의 시대를 열어갈 것 인가로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시대에 더 필요한 것은 어떻게 진보정치를 구현할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상생의 정치를 열어갈 것 인가이다. 진보정치 보다는 상생의 정치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것은 북핵 문제 때문이다. 일괄타결의 대 원칙아래, 미국과 북한이 협상테이블로 나와 핵무기 의혹 해소와 (전력공급을 포함한)물자지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설혹 일괄타결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북핵문제는 완벽한 사찰이 가능하지도 않으며 검증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 하에서 관건은 어떻게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북에 전력지원과 인도적 물자지원을 계속할 수 있는가 이고, 이를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런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는 민주개혁을 통해 진보정치의 시대로 이행하려는 노력보다는 상생의 정치 속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실현하는데 더 전력을 투구해야 할 처지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남·남갈등의 해소 없이는 북한이 겪고 있는 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과거처럼 보수수구세력을 약화시키고 진보세력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한국 시민사회의 분화는 이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을 강요받는 현실로 다가가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진보정치에 대한 강조에 못지 않게, 상생의 정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운동이 과거와 같은 단순한, 양자택일적인 이념과 운동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 우리 시대의 진보는 무엇이며, 한국적 맥락 속에서 민주주의의 의미를 어떻게 풀이할 것인가에 대해 보다 복합적이며 다원적인 사고와 고민이 요청되고 있다. 과연 시민사회와 진보세력은 이를 치열하게 성찰할 진지성과 성실성이 있는가? 과연 민주화세력은 각기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민주적인 토론을 거친 결론에 승복할 만큼 민주적이면서 성실한가? 이런 질문이 제기되는 이유는 김대중 정부가 민주주의 개혁에 실패하면서, 도처에서 민주화운동이 쌓아온 도덕성을 갉아먹는 사건들이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시민사회운동 내에서 내부민주주의나 절차민주주의의 중요성, 평화심성의 확산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3. 언론과 사회과학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네티즌 세대의 등장을 한국 정치의 희망적 징표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네티즌 세대의 정치적 거취는 그리 간단히 평가하기가 어렵다. 에릭 홉스봄(Eric Hobsbawm)은 그의 책 <극단의 시대>에서 1990년대 이후의 시대가 겪는 문화혁명을 말하고, 여기에서 청년세대의 등장을 구명한다. 이들은 새로운 소비주체로 자본주의 체제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컴퓨터를 포함한 신기술을 기성세대보다 더 잘 다루는 것을 통해서 후자를 제압하기도 한다. 또한 그들 사이에서 상업화된 대중문화는 놀랄 만큼 신속한 속도로 전파된다. 그들은 도덕률폐기론적이고 민중적이다. 그러나 이들의 등장과 함께 서구 시민사회는 혼란에 빠져있다. 이 신세대는 서구 민주주의를 받혀준 정당, 교회, 노조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현실은 이보다 나은 것인가?

우리의 신세대는 아직 자신의 모습을 본격적으로 형상화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드러난 단면들은 신세대의 등장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그들은 그간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이 담론화한 이데올로기를 거부하는 것 같다. 또한 그들은 대단히 개인주의적이고 휘발성이 강하다. 아직 그들이, 월드컵이나 촛불시위에서 드러나듯이, 긍정적인 방식으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은 한국사회가 지닌 독특한 집단주의, 강력한 민족주의적 결속력 그리고 교과서에서 배운 추상적인 서구의 이념이 그들을 묶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정치적 결집력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독일인이 통일 이후 월급의 6.5%를 단결세로 낸 것처럼, 과연 우리 신세대가 기꺼이 월급의 6.5%를 북의 동포를 지원하는 데에 낼 것인가? 이제 시민사회운동은 이 새로운 변화나 지구화(globalization)에 대응하여 보다 진지한 고민을 필요로 하고 있고,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 선거의 승리에 자축할 때는 지났다.

<전체토론1> 한국사회의 변화와 성격

토론

참고자료: 노동자의 힘 2003년 정세전망

고민택(노동자의 힘 중앙위원)

들어가며

지금 펼쳐지고 있는 '북 핵' 문제는, 그것이 단지 국내 또는 한(조선)반도 정세로만 국한되지 않고 세계 정세에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즉 '북 핵' 문제는 이라크 사태와 함께 2003년 세계(국제) 정세를 규정하는 사안이다. 이 커다란 두 문제가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결말이 날것인가에 지금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이라크 사태가 석유 자원을 둘러싼 것이라면, '북 핵' 문제 또한 동북아시아 또는 동아시아 경제 재편에 대한 각축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이 두 사안은 세계 자본주의, 특히 미국 제국주의 자본이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제국주의 자본은 이를 경제적인 방식이 아닌 경제 외적인 방식, 즉 직접적인 정치·군사적 방식을 곧 바로 동원시키고 있음으로써 그 긴장과 갈등이 훨씬 고조되고 있다. 이토록 이 두 사안에 정치·군사적인 방식이 동원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세계 자본주의 그리고 미국 자본주의의 위기가 그 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직접적인 정치·군사적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현재 맞고 있는 위기를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몰려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이라크와 북(조선)에 대해서는 이미 경제적인 제재 조치(실은 이도 정치·군사적인 수단이지만)를 강력히 시행하여 왔으

며 이제 그 실효가 거의 바닥났다는 점과 동시에 이라크와 북(조선) 모두 세계 자본주의 시장과 분리되어 있어 (경제적) 봉쇄 외에는 또 다른 경제적인 수단을 쓸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라크 사태가 '북 핵' 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국의 일방적인 또는 직접적인 군사 행동이 보다 덜 어려운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면, '북 핵' 문제는 미국으로서도 일방적인 또는 직접적인 군사 행동을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것은 석유 자원을 둘러싼 이해 관계에 있어서는 미국 외의 자본들도 어느 정도는 공동의 이해를 얻을 수 있는 가운데 다만 미국의 '일방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차원인데 비해 '북 핵' 문제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세계 강국들의 이해 관계와 미국의 이해 관계가 아직 조정·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은 속에서 진행되고 있어 그들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라크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식과 북(조선)이 택할 수 있는 대응 방식 사이에도 일국적·역사적·외교적 차이가 있는 것도 미국의 행동 반경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북 핵' 문제에는 한국이라는 중요한 변수가 끼어 있다.

알다시피 세계 자본주의는 지금, 이것이 곧 자본주의의 자동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지만, 분명히 일반적 위기 또는 전

면적 위기에 빠져 있다. 그것은 먼저 원론적·이론적 차원에서 볼 때 자본주의 경제 자체가,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가 법칙적으로 관철됨으로써, 위기(공황)를 주기적으로 불러올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이는 이미 세계 자본주의의 역사가 이를 웅변하고 있다. 부르주아 이데올로그들은 이를 단지 구조적·순환적 위기로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들은 왜 구조적·순환적 위기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눈감거나 '비자본주의적·비경제적' 이유를 들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 또는 세계 자본주의는 그러한 위기를 경제적으로는 신기술 개발, 시장 확장(창출), 구조조정으로, 정치·군사적으로는 제국주의 및 전쟁으로, 노자관계라는 측면에서는 착취의 강화와 노동계급에 대한 분리·분열 정책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는 보편성(자유민주주의)과 국지성(민족주의, 애국주의, 국가주의)의 병행으로, 사회적으로는 효율과 개인(능력 및 기호) 차이를 내세워, 문화적으로는 우월성·다양성 논리와 개별화, 파편화 전략으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장치를 통해 재생산하고 있다.

1970년 대 이래 세계 자본주의는 장기 침체에 빠져 있다. 자본주의 경제 또는 세계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자본에 대한 규제 완화, 노동유연화, 사유화), 자본의 지구화(동유럽 및 중국 등의 세계 시장으로의 편입과 인입, 금융세계화), 자본주의 질서 재편(WTO 체제)으로 활로를 모색해 왔다. 그러나 이는 곧 자본간, 국가간 경쟁을 극단으로 몰아가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자본간 전략적 제휴와 합병, 그리고 국가간·지역간 지역화(블럭화) 또는 자유무역지대 및 투자협정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것들은 자본간·국가간·지역간 경쟁을 완화시키기는커녕, 그 자체가 경쟁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경쟁을 더욱 강화·격화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다. 또한 걸프 전쟁, 크로아티아 전쟁, 소말리아 사태, 체첸 전쟁, 아프가니스탄 폭격 등 냉전 시대를 능가하는 군사 행동이 자행되었다. 지금 그리고 이라크 공격을 또 다시 눈앞에 두고 있으며, '북 핵' 문제 또한 군사 행동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세계 자본주의를 떠 받쳐왔던 미국 경제는 지금 침체에 빠져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이른바 신경제로 불릴 만큼 미국 경제의 성장을 주도해왔던 IT 산업이 불황을 맞고, 주식시장의 거품이 빠지고, 회계 부정 사건으로 미국 경제 또는 기업의 부실이 폭로되고 있다. 금리 인하(저금리 유지) 및 세금 감면 등을 통해 투자와 소비를 유도하고 있지만, 이 자체가 경기 침체의 산물일 뿐, 경기 침체를 벗어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달러화의 약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른바 쌍둥이 적자(재정 적자, 경상수지 적자)가 지난 90년 초와 같이 또 다시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부시 정권은 상대적으로 군수·석유 자본의 이해를 중심으로 전략을 펴고 있어, 이른바 월가의 금융자본(초국적 투자·투기 자본)과의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이 역시 단기적(현상적)으로는 미국의 세계 주도력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경제가 이중 침체(더블 덩)로 접어들다면 그야말로 세계 경제 전체가 디플레이에 빠져들어 이로부터 세계 공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제가 이중 침체로 접어들 경우 이를 방어할 수 있는 그 어떤 수단도 세

계에는 지금 없기 때문이다.

일본 경제는 지난 10년 간의 장기 침체를 전혀 벗어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 지금 일본 경제는 기업 부실과 은행 부실이 심각한 수준에 처해 있다. 이는 지금의 미국 경제가 겪고 있는 침체가 지난 10년 동안의 호황이 불러온 결과인 것과 같이 일본 역시 80년대 누렸던 호황이 낳은 후과를 겪고 있는 것이다. 일본 경제는 지금 자본주의 논리로 볼 때에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일본은 지난 10년 동안 급격한 구조조정을 회피해왔다. 구조조정이 과연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 진행된다고 해도 그것이 곧 침체를 벗어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인가에 대한 확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할 급격한 정치·사회 변동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본이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경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약 해외 투자 자본을 불가피하게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곧 세계적인 금융 공황을 낳을 수 있는 것도 일본의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일본은 미국과 같이 정치·군사적인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과 수단도 많지 않고, EU와 같은 확실한 자유무역지대도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인접 국가인 한국 및 중국과도 부분적으로는 치열한 경제 경쟁을 해야 할 상황일 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적으로도 동북아시아 또는 동아시아 국가들과 수월한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다. 또한 내수 진작을 통한 위기 탈출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렇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금의 상황이 계속되어 일본 경제가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면 이는 단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자본주의에 커다란 여파를 미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이른바 일본발 세계 공황이 터져 나올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이유이다.

EU는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록 미국이나 일본에는 못 미친 관계로 EU의 경제 향방이 곧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EU 역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함으로써 세계 경제의 동반 침체를 이끌고 하나의 변수인 것은 사실이다. EU가 경기 침체에 빠져 있는 이유 역시 세계 경제가 겪고 있는 이유와 마찬가지로이지만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는 EU 경제에서 가장 비중이 큰 독일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사실 EU의 탄생 자체가 실은 유럽 각국 또는 유럽 자본이 처해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정됐다는 점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는 미국 및 일본과의 경쟁에서 일정한 방어 수단이 되고 있다. 특히 EU의 단일 통화인 유로(EURO)는 달러 다음가는 국제 화폐로 기능함으로써 미국과의 경쟁에서 일정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EU는 영국이 걸림돌로 불거져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역 내 노동계급의 투쟁 여하에 따라서는 불협화음이 생길 가능성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남미의 경우는 대륙 전체가 심각한 경제 위기에 빠져 있다.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 혼란도 극심한 상태에 처해 있다. 아르헨티나는 국가 경제 자체가 사실상 붕괴되어 있으며, 브라질 역시 언제든지 외환위기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다. 최근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도 어려움에 처해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남미는 자기의 뒷마당이다. 그리고 북미 자유무역 협정에 이어 미주 전체 자유무역 협정 체결을 진행시키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미국이 미주 전체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다고 해도 남미의 경제 상황이 열악한 결과로 그 자체가 미국 경제의 위기를 완화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그나마 남미의 경우 브라질 룰라 정권의 등장으로 브라질, 쿠바, 베네수엘라로 이어지는 이른바 좌파(반미)벨트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아르헨티나까지 이에 합류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미국으로서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남미 각국이 겪고 있는 외환위기를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미국이 남미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로 묶어두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미의 경우는 이미 미국 자본이 충분히 우려먹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남미가 연속적으로 외환위기를 맞는다면 이 역시 미국 경제, 따라서 세계 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른바 남미발 세계 공황이 일어날 현실적 가능성이 준비되고 있다.

일본을 제외한 동북아시아 및 동아시아는 그나마 세계 경제에서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국 경제는 7~10%에 이르는 고도 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비록 중국 내부적으로는 국유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천만명에 이르는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고, 도시와 농촌간, 연안과 대륙간 지역 격차가 엄청나고, 빈부 격차가 심각한 지경이며, 부정부패 또한 비일비재하지만 현재의 성장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

이다. 중국은 WTO에 가입함으로써 대외 개방에도 성공(?)하게 - 미국은 한 때 중국의 WTO 가입에 제동을 걸었다 - 되어 세계 시장에 확실히 진입하였다.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10년 상하이 세계무역박람회 유치를 이끌어 내고, 대내적으로는 서부개발에 착수함으로써 당분간 성장을 계속할 수 있는 내외적 조건과 기반을 갖고 있다. 비록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기는, 그러나 이 때문에 중국 경제와 시장에 대한 외국 자본의 투자가 러시를 이루고 있는 것도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이 과연 세계 자본주의에서 미국에 이어 또 하나의 거대 패권국으로 등장할지의 여부는 아직 속단하기 이르지만 중국은 그 방향을 향해 달리고 있다. 문제는 중국이 거기에 이르는 동안 세계 자본주의가 급격한 위기에 빠지지 않을 것과 국내적으로 정치 안정을 이어가는 것,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혼란에 빠지지 않을 것 등을 필요로 할 뿐이다. '북 핵' 문제를 대하는 중국의 기본적인 인식과 태도도 여기에 있다.

끝으로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의 경우는 그 지역의 경제가 당장 세계 경제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은 아닌 속에서 조금씩은 성장세가 나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자체의 성장 잠재력이 많지 않아 세계 경제로부터 받는 영향에 따른 굴곡을 겪을 전망이다.

한편 위와 같은 세계 자본주의의 운동은 그에 따르는 세계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투쟁적 동학을 형성시키고 있다. 비록 미국의 경우 아직은 투쟁 동학이 본격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전에 없었던 대중투쟁이 보이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는 90년 대 중반 이후 대중투

쟁이 급격히 활성화되고 있다. 남미 또한 아르헨티나의 경우 준 혁명적 상황을 맞고 있으며, 브라질에서는 룰라가 집권에 성공하고, 한국 역시 자유주의 세력(부르주아 개혁 분파)의 재집권 성공과 함께 '진보정당'의 제도권 진입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미국에서 부시 정권이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는 민주당 정권이 비록 공화당 정권에 비해 상대적으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덜 악의적이긴 하지만 절대적으로는 명백히 신자유주의 정권이라는 측면에서 공화당과 차별성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속에서 대외 정책에서 정치·경제적으로 보다 공격적이고 대내적으로 보호무역 성향을 띠는 부시 및 공화당에게 군수·석유 자본이 절대적·전면적 지지를 보내고 동시에 경제 침체에 불안을 느끼는 중산층과 노동자 또한 강력한 미국을 기대한 때문이다. 특히 9·11 사태를 계기로 미국 전역에 불고 있는 애국주의 열풍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유럽의 경우 시민주의 정권에 실망한 대중들이 직접적인 대중투쟁에 나서고 있는가 하면, 그나마 어쩔 수 없이 시민주의 정권을 재 선택하거나, 오히려 극우 민족주의 세력이 등장하는 역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고, 비제도 좌파가 선거에서도 일정한 진전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남미에서도 신자유주의가 사실상 파탄 난 상태에서 기존 정권에 대한 이탈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무엇보다 세계적 차원에서 반세계화(신자유주의)·반미·반전 대중운동이 활기를 띠고 있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 신자유주의가 낳고 있는 폐해에 대해 세계 노동자 민중들의 반발과 투쟁이 새롭게 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으로 미국이 일방

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는 패권적·군사적 행동에 대한 반발과 저항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에서의 '촛불 시위'도 그 계기는 여중생 죽음으로부터 주어졌지만 이와 같은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정치·투쟁 동학이 아직은 세계 자본주의 및 각국의 부르주아 정권, 그리고 제국주의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수준으로는 진전되고 있지 않다. 세계 자본주의가 전 세계 노동자 민중을 고통으로 몰아 넣고 있고, 부르주아 정권에 대한 무관심, 반발, 이탈 현상이 보이고 있는 속에서도 세계 자본주의가 건재(?)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도 바로 전 세계 노동자 민중의 정치·투쟁 동학이 아직은 미약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이른바 좌파 세력이 보여주고 있는 무능함과 무기력함도 빼 놓을 수 없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속에서 지금 한국사회는 '촛불 시위'와 함께 노무현 당선, 그리고 '진보정치'의 제도권 진입 가능성이 가시권에 들어오는 등 전에 없던 새로운 현상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가 그 동안 사실 변화의 와중에 있었으며 그러한 변화가 한국사회의 계급 역학 및 정치지형의 변화를 몰고 오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특히 그 무엇보다도 '북 핵' 문제가 전면적으로 떠올라 있어 이를 둘러싼 국내 및 한(조선)반도, 나아가 동북아 정세가 한치 앞도 예상하기 어려울 만큼 혼미 속에 빠져 있다. 이와 같은 정세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놓고 지배계급은 물론 노동자 민중 특별히 좌파 세력은 지금 거대한 변화와 도전을 맞고

있다.

그러한 변화와 도전은 당연히 세계적 흐름과 맥이 닿아 있지만 한편으로는 87년 이후 한국사회의 보다 구체적인 역사적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아래 글은 2003년이라는 제한된 시공간을 대상으로 여기에 대한 개략적이고 초보적인 분석을 제공하고자 한다.

1 정세 전망

1. 한국사회 계급역학과 정치지형 변화 예상

(1) 전체 계급역학 : 부르주아 계급과 노동계급 사이의 헤게모니 전선 형성 본격화
87년 이전의 한국사회 전체 계급역학은 큰 틀에서 볼 때, 부르주아 계급이 절대적 우위를 점한 속에서, 군부독재세력이 민주화세력을 억압하는 관계로 나타났으며, 87년 이후에는 민주화 세력이 군부독재 세력을 앞지르는 역학 구도로 점차 변화됐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87년 이후 지난 15년 동안은 이른바 민주 대 반민주 역학 구도가 점차 약화되고 노동과 자본의 대립 구도가 새롭게 형성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이는 부르주아 계급과 근본적으로 이해를 달리하며 동시에 자유주의 세력으로부터도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노동계급이 형성되기 시작한 데 따른 것이다. 그에 따라 전체 계급 역학에 있어서도 부르주아 계급이 차지했던 절대적 우위가 상대적 우위로 바뀌는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정치적으로 수렴한 세력은 부르주아 계급도 노동계급도 아닌 자유주의 세력이다. 이는 이번 16대 대선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세력이 부르주아와 계급이나 노동계급과

같이 하나의 독자적인 계급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사회에서 자유주의 세력이 정치권력을 담당할 수 있게 된 것이 그들 자신의 독자적인 계급(소부르주아 계급) 기반이나 역량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닐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럴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의 자유주의 세력은 이미 부르주아 계급 또는 지배세력의 한 분파를 이루고 있으며, 반면에 이들 세력과 노동계급 사이의 관계는 적대적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난 15년의 과정은 전체적으로 부르주아 계급의 헤게모니가 강화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노동과 자본의 대립 구도에도 불구하고 아직 노동계급의 헤게모니 형성은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16대 대선 결과 또한 이의 연속인 것은 분명하다. 여기서 부르주아 계급의 헤게모니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 곧 노동계급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부르주아 계급의 헤게모니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은 곧 노동계급이 형성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이번 16대 대선 결과, 즉 노무현이 당선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또는 거시적인 근거는 노동계급의 형성과 이들의 정치적 성장에서 찾아야 한다. 물론 역으로 노동계급의 형성과 정치적 성장이 아직 지체·지연된 결과로 볼 수도 있었지만 이는 현 한국사회의 계급 역학을 무시한 과도(무리)한 분석이며, 정세에 대한 관념적·주관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후의 전망이다. 이 점에서 여전히 노동과 자본의 대립 구도가 계속되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김대중 정권 아래에서 형성된 신

자유주의 대 반신자유주의 대립 구도를 대체할 만한 그 어떤 주·객관적 근거를 달리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노동과 자본의 대립 구도, 즉 신자유주의 대 반신자유주의 전선이 강화될 것인가, 아니면 약화될 것인가의 문제는 남아 있다. 이를 전망하는 데 있어 핵심은 노무현 정권의 반노동자성이 언제 어떤 형태로 폭로될 것인가 또는 폭로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 있다. 이 측면에서 노무현 정권은 변수가 아닌 상수이며, 반면 노동계급의 태도가 변수가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즉 노무현 정권이 능동적으로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여지도 거의 없지만 동시에 노동계급이 먼저 반신자유주의 대중투쟁전선을 즉각 강화하고 나설 수 있을 것인가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급격한 경제위기나 이에 버금가는 정치·사회적 위기가 닥치지 않는다면 -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 - 노동과 자본 사이의 전면적인 대립이나 충돌 또한 현실화 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이후 전체 계급 역학은 잠정적으로는 노동과 자본 사이에 전면적인 대립과 충돌을 예비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안적·일상적 대립과 투쟁을 펼치는 속에서 부르주아 계급과 노동계급 사이에 헤게모니를 다투는 대립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2) 정치지형 변화 : 보수세력의 분화와 '진보세력'의 제도권 진입

이번 16대 대선 결과 - 각 계급(정치)세력이 차지한 득표율 - 를 놓고 볼 때 지배세력(계급)과 피지배계급(세력) 사이의 힘 관계는 그 전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민주

노동당과 사회당이 차지한 4% 득표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계·보궐 선거가 아닌 지난 2000년 4·13 총선과 2002년 6·13 지방선거 그리고 이번 16대 대선과 같은 전국 선거에서 이른바 '진보진영'은 꾸준히 4~8%의 득표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진보진영'이 제도 정치권으로 진입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사회 제도정치지형이 기존 보수 정치 일색에서 탈피하게 됨으로써 그에 따라 새로운 정치지형이 창출·형성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87년 이후 한국사회 제도정치지형은 이른바 3김 정치로 언명된 것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보수 3당 체제가 주축이 되었다. 그리고 이는 지역 구도와 맞물려 선거와 의회 정치 차원에서 노동계급과 민중의 정치를 철저히 차단하거나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힘으로 작용했다. 또한 '제왕적 대통령'은 그나마 선거와 의회를 또 다시 2중으로 무력화시킴으로써 정당을 보스의 '사당'으로 전락시키고, 의회를 권력의 '시녀'의 만들었다. 이런 조건에서 이념 또는 정치노선과 정책을 중심으로 한 정치는 발붙일 수 없었다. 이 또한 노동계급과 민중의 정치적 성장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바로 이 때문에 지배계급은 또한 정치위기를 맞게 되었다. 먼저 그와 같은 지형과 정치 행위는 정치의 효율을 떨어뜨림으로써 날로 격화되는 자본간 국가간 경쟁에서 효과적인 대응을 어렵게 하였다. - 물론 이는 지배계급 내부의 사정일 뿐이다 - 동시에 노동계급과 민중으로부터는 물론이고 자유주의적 세력들에게조차 불신과 불만을 낳게 하였다.

이번 16대 대선도 이미 기존 보수 3당 체

제가 변화(변형)된 지형 위에서 치러졌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앞으로 더욱 강화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먼저 보수 정치 세력 내부의 분화를 예상할 수 있다. 이는 이전까지 나타났던 단순 이합집산이나 합종연횡하고는 달리 최소 수준에서나마 '노선과 정책' - 계급·계층의 이해 - 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재편 또는 분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것은 보수와 중도로의 모습을 띠고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진보진영'의 제도 정치권 진입까지를 고려한다면 한국사회 제도정치 지형은 전체적으로 보수-중도-진보의 구도로 짜질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이러한 구도로의 분화 또는 재편은 먼저 한국의 지배계급이 보수와 중도로 분화하는 것을 통해, 항상적인 경제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폭발적인 정치 위기 국면을, 제도적으로 완화·수렴할 수 있는 틀을 일단은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에 '진보진영'의 제도권 진입이 이를 안정화하는 기제로 작용할지 아니면 혼드는 구조로 작용할지는 지금으로서는 속단하기 어렵지만 현실적으로는 전자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지금의 대중투쟁역량과 비민주노동당 좌파의 역량이 갖는 한계로 인해 대중투쟁전선이 제도 정치지형을 압박·강제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장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보수-중도-진보로의 구도는 중장기적으로 노동계급의 헤게모니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을 할 수 있다. 이는 이제까지의 대중투쟁이 한국사회의 계급 역학을 형성하는 가장 결정적인 동력으로 작용했음

에도 불구하고 현실 제도 정치의 벽에 부딪혀 노동계급의 헤게모니를 강화하는 결과로 귀결되지 못했다면 제도 정치지형의 변화는 노동계급의 헤게모니를 강화하는 데 유리한 국면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사회세력관계의 새로운 구도 형성 : '87년 체제'의 진화

87년 6월 항쟁과 7~9월 노동자대투쟁은 이른바 '87년 체제'로 불릴 만큼 한국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왔다. '87년 체제'란 한마디로 한국사회가 - 부르주아적 용어 또는 서구적 의미로는 '근대화' - '민주화' 사회로 진입하는 입구를 통과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비하면 이번 대선 결과가 87년과 같이 한국사회를 그 이전과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사실 이른바 '탈근대화' 또는 '후기 산업사회'와 같은 담론은 그 자체의 독자적인 사회구성체를 갖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것들은 단지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오늘의 세계는 명확히 자본의 반동의 시대, 즉 신자우주의 사회이다. 그리고 이번 대선 결과도 신자우주의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한 지배계급은 물론 소부르주아의 분석은 마땅히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최소한 '87년 체제'가 더 이상 단순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가능하다. 먼저 정치지형 차원에서 이른바 3김 정치는 그 부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87년의 산물이다. 이제 이는 그 생명을 다하고 역사의 뒤편으로 퇴장했다. 또한 '87년 체제'는 노동계급이라는 범주를 낳았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범주가 아니다. 오히려 지금은 노동계급 내부의 분화가 이미 새로운 현상으로 등장해 있다. 알다시피 '87년 체제'의 성립에도 불구하고 '진보진영'의 제도권 진입은 열리지 않았다. 이제 이는 더 이상 물리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있다. '87년 체제'는 노동계급 1세대가 중심이 되어 형성하였다면 이제는 노동계급 2세대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87년 체제'는 여전히 북의 안보 위협, 그것이 실질적이든 이데올로기적 차원이든 사회 전반을 규정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위에서 성립하였다면 지금은 비록 '북 핵' 문제가 전면화되고 있는 속에서도 과거의 규정력과는 내용과 강도를 달리하고 있다. 이밖에도 87년 당시에는 전혀 없었던 '인터넷 세대'라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랬을 때 지금까지 한국사회를 실질적으로 규정해왔던 전통적(친일, 친미, 반복, 반공 수구세력) 지배계급의 위력은 약화되었으며 이번 대선은 이들에게 커다란 패배를 안겼다. 이에 비하면 친자본적 자유주의 정치세력은 한편으로는 자신을 지배세력의 한 분파로 안착시키는 데 성공하고 있으며 시민운동세력을 자신의 정치적 지지 기반화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새로운 주류로 점차 성장하고 있다. 이들은 자본과의 관계에서 신자우주의를 앞장서 실현함으로써 자본의 비토세력이 되는 것을 방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자우주의 개혁을 앞 세워 자본 내부를 재편하려는 의도를 띠고 있다.

또한 노동계급 속에서 성장한 소부르주아 세력은 신흥 정치 엘리트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대선에서 노동계급과 민중의 정치적 지지를 놓고 앞으로 친자본적

자유주의 세력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대중적 기반과 조직적 중심을 확보했다. 이들 세력은 노동자, 농민, 영세 자영업자, 도시 빈민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 개발, 비정규직, 여성, 장애, 이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층과의 연대, 환경, 인권, 평화 등 이른바 정체성 정치에 대한 개입, 그리고 반미, 통일 등 민족문제에 대한 쟁점화를 시도하면서 세력 확장을 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주변부 세력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비민주노동당 좌파세력과 현장노동자는 이번 대선에서 의미 있는 하나의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등장하는 데 실패했다. 나아가 노동자 민중진영 내부의 분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체적인 조건과 객관적인 명분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전에도 비민주노동당 좌파세력과 현장노동자는 비록 한국사회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지는 못했지만 대중투쟁전선에 대한 개입을 통해 전체 계급정세를 형성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적지 않게 발휘하였으며, 노동자 민중운동진영 내부적으로는 사민주의, 민족주의 세력과 함께 변혁세력으로서의 위상과 입지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대중적 노동운동의 실리주의 및 조합주의가 더욱 강화되고 이에 편승하여 또는 이를 조장하면서 '진보정치'가 기승을 부릴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스스로 획기적인 변화를 꾀하지 못한다면 과거와 같은 역할과 비중이 약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이들 주체는 내부적으로 정치적 전망과 조직 건설을 둘러싸고 통일성이 매우 낮다는 취약점까지 안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처지에 몰린

세력은 앞에서 말한 전통적 지배세력과 바로 비민주노동당 좌파세력과 현장노동자이다.

(4) 여론 및 의제 형성 수단·과정의 새로운 방식 등장 : 쌍방향 구조

이제까지 한국사회의 전통적 지배세력은 정보독점력을 통한 여론 형성·조작 능력을 맘껏 발휘해 왔다. 이것이 권력 형성의 결정적 근거는 아니지만 최소한 권력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일방 통행은 점차 위력이 약화되고 있다. 최소한 확인 가능한 거짓 정보는 더 이상 통할 수 없게 되었다. 나아가 정보에 대한 일방적 규정과 해석도 과거와 같은 정치적 의미와 위력을 발휘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력이 획기적으로 확장됨으로써 소수 엘리트 중심으로 형성되던 '여론 시장'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번 선거는 대규모 군중동원을 통한 선거 방식에서 이른바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선거 방식으로의 전환을 가져왔다. 특히 인터넷 및 휴대전화를 통한 실시간 의사 소통이 가능해짐으로써 이의 활용이 여론과 의제 형성의 새로운 수단으로 등장했다.

그 동안 이것들은 주로 사적(私的)인 공간으로만 사용되거나 주로 상업적 광고나 각종 대중 '스타'에 대한 '신변잡기'를 유통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정치적·사회적 여론, 담론, 의제 등을 형성하고 유통하는 하나의 공적(公的)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온라인에서만 단순한 의사 소통이나 시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촛불 시위'가 보여주듯이 오프라인, 즉 거리에서 광장에서 직접 대중을 움직일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나

아가 특정 단체 또는 주체가 아닌 단순(?) 개인도 수만, 수십만을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과거에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현상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르기까지는 이미 지난 10여 년에 걸친 역사적 축적 과정이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난데없이 터져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사적(史的) 과정이 있었던 것이다. 이는 지금의 현상을 다시 원년으로 삼아 다시 시작한다고 할 때 5년, 10년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기조차 쉽지 않다.

물론 이에 대한 과도한 해석이나 의미 부여는 경계해야 마땅하다. 예컨대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 기구나 장치가 갖는 위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들이 사회의 물적 체계와 구조를 장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제도적 수단을 통한 통제와 제어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실질적으로도 전통적인 미디어는 말할 것도 없고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역시 현실 세계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다. 즉 현실 계급 관계가 그것들을 규정하는 것이지 그 역은 될 수 없다. 또한 그들 수단을 통한 의사 소통이나 토론은 기본적으로 불특정·무정형이라는 특성을 갖으며, 그런 만큼 특히 기본적으로 의제 선정에서의 이념적·정치적 제약은 물론 지속성과 책임성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약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를 전제하더라도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매개로 한 의사 소통과 토론이 가능해짐으로써 전통적인 매체, 즉 거대 신문과 방송(자본과 권력)을 통한 위로부터의 일방적인 전달 구조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즉 여론과 의제 형성에서의 쌍방향

소통 구조가 가능해졌다. 따라서 이제껏 소수 엘리트 또는 이해(이익)집단의 이데올로그들의 여론 및 의제 독과점 현상은 상당히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노동자 민중의 직접적인 투쟁을 매개하지 않더라도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사이의 전선이 형성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5) 대중의 대북·대미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태도

지금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 가운데 정치적 의미와 사회적 파급력이 가장 큰 것은 대중의 대북, 대미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서해 교전' 사태나 '북 핵' 문제를 대하는 대중의 반응은 과거와 비교해 혼란이나 동요를 거의 일으키지 않고 있다. 그에 비하면 미국, 특히 부시 정권의 일방적 패권주의와 군사 행동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태도는 대단히 부정적이며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 그 동안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힘으로 작용했던 친미, 반북 이데올로기가 급격히 후퇴하고 있다. 그 동안 한국사회에서 친미, 반북은 건드릴 수 없는 일종의 성역으로 취급되었지만 이제 그것들은 성역이 아니라 현실에서 논의되고 검토되어야 할 선택의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이제까지 없었던 전혀 새로운 현상이다.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데에는 그 배경이 있다.

첫째 북의 대남 전략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른바 '적화통일'이나 남의 대북 전략으로 가장 유력시되었던 이른바 '흡수통일' 모두에 대해 그 현실성과 실현성이 높지 않다는 것에 대한 대중적 공감과 이해가 널리 퍼져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곧 대중이 북의 존재로부

터 남의 체제나 안보 위협을 느끼지 않고 있으며 동시에 '북의 붕괴'를 원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남과 북이 하나의 민족이며 언젠가는 통일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민족주의 또는 민족의식·정서와 동시에 남과 북이 하나의 '경제 단위'가 됨으로써 보다 강력한 생산력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자본주의)체제 의식 또는 경제적 실리주의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예컨대 이념적 민족주의나 북의 체제에 대한 동경은 대중적 수준에서는 크지 않으며 오히려 북에 대한, 특히 북의 인민의 생존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앞서 있다. 이와 같은 바탕 위에서 '북 핵'에 대해서도, 비록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를 미국의 대북 강경·봉쇄 정책에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불가피한 수단·전술로 이해하는 경향이 점차 다수가 되고 있다. 6·15 남북정상회담과 북의 개혁·개방정책 그리고 남북 교류 및 대화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 이러한 인식을 뒷받침하고 있다.

둘째 지금까지 미국은 상식적(?) 수준에서 한국과 한국민에게 북의 위협에 대해 남의 안보를 지켜주는 버팀목과 같은 존재로 받아들여졌다. 이는 물론 그 동안 한국사회를 지배해왔던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와 지배전략에 의해 학습되고 훈련된 결과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미국은 오랜 동안 한국의 독재 정권을 지원하는 후견인 역할을 해왔으며 제국주의적 행사를 해왔다는 비판의 대상이기도 했다. 전자가 주로 대중적 차원의 인식이었다면 후자는 주로 소수 운동권만의 문제제기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지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IMF, WTO, 투자협정 등에 맞선 노동자 민중의 저항과 투쟁이 대중적 차원으로 번져

나왔다. 그러다가 미국에 부시 정권이 들어선 이후, 특히 9·11 사태를 계기로 미국의 일방적인 패권주의, 군사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북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면서 그 여파로 한(조선)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감돌게 되면서 부터 대중의 미국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쌓이게 되었다. 결정적으로는 두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에 깔려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의 처리가 일방적으로 진행되면서 대중의 불신과 불만은 분노로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으며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그 원인 제공자가 미국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로써 그 동안 소수 운동권이 갖고 있던 미국에 대한 문제의식이 꼭 같은 차원은 아니지만 상당한 수준으로 대중화되고 있다. '촛불 시위'는 그 상징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앞으로 한국사회의 정치 지형의 변화에는 물론 계급 역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나아가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일대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사회적 변수가 될 것이 분명하다.

2. 노무현 정권의 성격과 정국운영 전망

(1) 노무현 정권의 성격 : 신자유주의정권

노무현 정권은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 정권이다. 먼저 노무현 정권은 국내외 독점자본 또는 초국적자본의 이해를 거스를 의지와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 노무현은 대선 기간 동안 김대중 정권의 최대 업적의 하나로 IMF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해결했다는 점을 들고 있으며, 그 자신이 시장경제를 더욱 진전시키겠다

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분명히 밝혀왔다. 노무현이 말하는 재벌 개혁도 김대중 정권이 시행한 한국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로의 재편을 위한 일환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볼 때 노무현의 재벌 개혁도 김대중 정권의 재벌 개혁과 마찬가지로 그 어떤 진보적인 내용도 갖고 있지 않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미국 월가의 자본가(투자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블룸버그 통신은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는 입장을 공공연히 들고 나왔다. 이게 아니더라도 노무현 자신이 경제특구법을 앞장서서 찬성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노동유연화가 경직돼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가 확실한 신자유주의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노무현이 그나마 유일하게 노동자를 옹호(?)하는 발언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너무 많다고 한 것인데 이는 일종의 정치적 수사(립서비스)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그 말이 진실이라면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철폐해야 하는 데 기껏해야 자본가에게 선의(?)의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노무현 정권이 비록 수구 보수 세력의 지지를 받고 탄생한 정권은 아니지만 신자유주의 정권이라는 측면에서 정확히 김대중 정권을 계승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한국사회 계급 역학이나 정치지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수구 보수 세력을 대표하는 한나라당의 왼쪽에 있으며 노동자 민중의 오른 쪽에 있다는 점에서 중도주의 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계급 역학과 정치지형을 고려한 상대적 의미에서 그러할 뿐 노무현 정권의 정치적·계급적 성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신

자유주의 정권이라는 점에서 김대중 정권이 그렇듯이 명확히 반노동자 정권이다. 그러나 구체적 지점에서는 김대중 정권과 비교해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노무현 정권은 김대중 정권 등장 당시에 비해 객관적 여건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 위에 놓여 있다. 김대중 정권은 당장의 외환위기를 벗어나고 한국 자본주의와 한국사회를 신자유주의로 재편하기 위해 가장 먼저 노동자 민중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 때문에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합의 기구를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민중과의 대립과 갈등은 정권 내내 지속되었으며 정권 퇴진 투쟁을 맞기에 이르렀다. 이에 비하면 노무현 정권은 이와 같은 부담과 비용을 덜 지불해도 되는 조건에서 출발한다. 또한 노무현 정권은 그동안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빈부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바로 이 때문에 노동자 민중의 저항을 심하게 불러왔다는 인식 아래 유럽식 특히 독일식 신자유주의를 좀 더 원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독일 시민주의 정권처럼 노동자계급을 지체 기반으로 하는 정권이 아니라는 근본적인 차이를 갖고 있다. 그렇다고 노무현 정권이 남미에서 나타난 바 있는 민주주의(포퓰리즘)적 정권의 성격을 떨 가능성도 낮다. 한국 자본주의와 지배계급의 역량으로 보아 남미식 민주주의가 요구되는 지형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데올로기 또는 지배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끊임없이 '탈계급화', '탈정치화'를 이루기 위해 포퓰리즘과 같은 정치 행위를 구사할 가능성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노무현 정권의 지지 기반이 아직 계급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고 더구나 취약하다는 데서

특히 정권 초기에 그럴 수 있다는 전망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는 2004년 총선에 대비해 민주노동당을 견제·고립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과정으로 배치될 수도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노무현 정권은 신자유주의 정권이라는 기본적(보편적) 전제 아래 한국형 중도주의 정권을 안착시키려는 실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현 정권은 김대중 정권의 '햇볕 정책'을 기본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본디 '햇볕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맥락을 띠고 있다. 하나는 남북관계를 긴장완화 시키려는 것이다. 예컨대 한(조선)반도의 '탈냉전화' 정책이다. 또 하나는 남북 경제 단일화(협력)를 기반으로 동북아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 블록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즉 새로운 경제 블록을 형성하려는 '시장확장' 정책이다. 여기서 '탈냉전화'와 '시장확장'은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그런데 알다시피 여기에는 기존 한미일 남방동맹과 북중러 북방동맹이라는 전통적인 군사적 긴장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미국의 한태평양 경제 블록 구상과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내심으로 일본조차 선호하는 동북아 경제 블록 형성과의 긴장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 바로 여기에 남의 '탈냉전화'와 '시장확장' 정책과 북의 '체제 안정화(유지)' 정책과 '개혁·개방' 정책이 맞물려 있다. 한국 자본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전통적 한미일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미국 시장을 보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미국 시장을 능가하기 시작한 중국 시장을 강화하고 나아가 동북아 경제 구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경직된 한미일 동맹관계는 역으로 이의 걸림돌이 되는 형국에 놓여 있다. 북의 입장에서 보면 '체제 유지'와 '개혁·개방' 정책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는 역시 전통적인 북중
러 협력을 필요로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미국
과의 긴장완화 또는 관계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처지에 놓여 있다. 바로 이러한 지형
과 역학이 남과 북의 지배계급 모두에게 현
실적·이데올로기적으로 이른바 '민족 공조'
를 필요로 하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
무현 정권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일방적인
친미·반북 정권도 아니지만 역시 반미·민
족주의(자주) 정권도 될 수 없다.

**(2) 노무현 정권의 정국 운영 방향 : 구
체제·주류 -> 신체제·주류로의 교체 시도**

노무현 정권의 정국 운영 방향은 김대중
정권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고자 할 것이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이 김대중 정권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는다고 할 때 그것의 영역은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예컨대 노무현
정권 역시 김대중 정권과 마찬가지로 신자유
주의 정권으로서의 기초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 또한 대북, 대미 관계에서도 기존 '햇볕
정책'을 이어갈 것이다. 그렇다고 할 때 노무
현 정권이 김대중 정권과 비교해 변화를 꾀
할 수 있는 영역은 주로 제도 정치권의 기존
낙후하고 부후한 정치 관행 또는 정치 시스
템이라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정치 개혁'이
다. 김대중 정권을 우호적으로 보는 세력들도
김대중 정권의 실패 이유를 바로 '정치 개혁'
의 미진에서 찾고 있다. 이 때문에 수구·보
수 세력의 공격을 자초했으며 부정부패 역시
그것의 결과라고 보고 있다.

87년 이후 한국 제도정치는 '민주화'라는
거대 정치 담론 또는 과제를 중심으로 정치
행위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절차
적·형식적 민주주의는 선거의 안정적 재생

산이 정착되었다는 점에서 일정한 진전을 이
루었다. 그러나 계급정치 차원은 빼고라도 제
도 정치 또는 부르주아 정치 수준에서조차
정당 내부의 민주화나 정치 관행은 거의 답
보 상태에 놓여 있었다. 예컨대 보스정치, 계
보정치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제도 정
당은 공당(公黨)(?)이라기보다는 사당(私黨)
에 가까웠으며, 그 결과 의회는 입법부라기보
다 행정부(여당 또는 대통령)의 시녀 또는 거
수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정치
인의 무분별한(?) 당적 이동 및 정당의 무원
칙한(?)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이 이루어짐으
로써 정치에 대한 대중의 무관심과 불만은
높아만 갔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노동자
민중의 대중투쟁은 빼고라도, 급기야 제도 정
치 또는 지배계급 일반의 위기를 자초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여기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정치 개혁'이다. '국민경선제' 실시
와 당·정 분리도 이로부터 강제된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탄생하게 된 또 하나의 배
경이 바로 기존 제도 정치의 낙후하고 부후
한 정치시스템이다. 그것들은 정치를 대중과
분리된 '특수 또는 별도' 영역으로 만들었으
며 대중을 정치로부터 소외시키는 한 원인이
되게 하였다. 이번 대선 결과는 바로 이에 대
한 대중들의 응답이었다. 따라서 노무현 정권
은 '정치 개혁'을 화두로 앞세워 기존 낙후하
고 부후한 정치 관행 또는 정치시스템을 변
화시키고자 할 것이 분명하다. 노무현 정권의
정국 운영의 키워드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를 통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의도하려 할 것
이다. 하나는 위기에 처한 제도 정치 또는 부
르주아 정치의 정치력을 재생·복원하는 것
이고 또 하나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취약한
정치 기반을 다지는 것이다. 특히 이른바 '참

여 민주주의'를 내세워 '정치 개혁'에 반발하
는, 즉 '정치 개혁' 과정에서 기존 기득권을
위협받는, 세력을 제어하면서 인적 청산 또는
물갈이를 하려 들 것이다. 예컨대 세대 교체
를 통한 세력 교체를 시도하는 것이다. 또한
인사와 정책에서의 검증과 책임 시스템을 보
다 객관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정쟁을 피하고,
권력의 부담을 최소화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
다.

노무현 정권의 이러한 정국운영 방향과 구
상이 궁극적으로 성공할지는 현재로서 단언
하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커다란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크게 세 가지 배경을 들 수 있다. 하나는 '정
치 개혁'은 이미 제도 정치권은 물론 대중적
요구로 떠올라 있으며, 다음으로 한국사회가
87년 이후 체제로 전화하는 흐름에 놓여 있
다고 할 때 이는 노무현 정권의 의도와 모순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노동계급의 역량
이 노무현 정권의 '정치 개혁'과의 투쟁전선
을 즉각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측면에
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권의
이러한 정국운영 방향 또는 구상은 노동계급
에게는 일종의 '계류'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그러한 정국운영이 노동계급의 직접적
이해나 요구를 반영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그를 반대하는 것
만으로는 부적절하거나 부족할 수 있기 때문
이다.

(3) 노무현 정권의 지지 기반

노무현 정권의 정치적 지지 기반은 현재로
서는 매우 취약하다. 노무현 정권은 전체 유
권자의 과반수에 훨씬 못 미치는 약 1/3의
지지로 탄생한 정권이다. 의회에서는 소수파

(상대인 한나라당은 과반수를 넘는 거대 야
당이다) 정권일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약화되어
있다. 또한 조직된,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으
로부터는 물론 그 동안 한국사회를 장악하고
있던 이른바 주류 세력으로부터도 거부를 당
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도 한계를 안고 있
다. 노무현 정권은 김대중 정권이 안고 있던
정치적 지지 기반의 한계와 취약성을 그대로
이어 받고 있다. 예컨대 '선거 혁명'이니 '세
대 혁명'이니 아무리 외치고 의미를 부여해
도,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은 별개로 하고, 87
년 이후의 최초로 맞는 양강(2자) 대결이라는
구도 속에서조차 87년 이후 가장 낮은 약 70
여% 투표율에 겨우 2.3%, 약 57만 여 표를
앞섰을 뿐이다.

알다시피 노무현은 민주당 내에서조차 이
른바 장악력과 지도력을 갖지 못했다. 이 점
은 김대중 정권과 비교해서도 훨씬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무현의
당선이 민주당의 정권재창출이 아니라는 주
장은 좋게 보면 노무현으로 표상하는 대중의
정치 개혁에 대한 열망을 강조하려는 것이
지만 그 이면은 그의 당내 기반이 취약하다
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무엇보다 노무현의
당선이 기존 제도 정치의 한계에 대한 대중
의 불신과 불만이 표출된 것이지만 그 정도
는 위에서 본 수치가 증명하듯이 아직 미약
하다. 즉 노무현이 극히 어려운 여건에서 당
선 된 극적인 결과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조
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정치는 현실이다.
이제부터 노무현은 현실 정치 지형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일일이 대중의
힘을 끌어다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한 대
중은 노무현을 당선시킨 힘으로 노무현 정권

을 언제든 공격할 수 있다. 노무현이 당선 직후 '대화와 타협'을 강조한다든가, 반대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표현은 단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그의 정치적 지지 기반이 그 만큼 취약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렇다고 할 때 노무현 정권의 정치적 운명은 의외로 빨리 결정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장은 '북 핵'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현실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 있지만 이를 포함해 차기 총선까지 한나라당을 비롯한 주류 세력의 반발을 얼마나 무마하면서 정국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차기 총선에서 다수파가 되거나 최소한 정치적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에 의해 결정날 것이다. 또한 그 때까지 재벌 개혁에 따른 재벌 집단의 반발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저항과 투쟁을 견디 내거나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가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의 '정치 개혁'은 그 자체가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과 요구를 해결해 줄 수 없으며, 자본의 수익성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다. 김대중 정권이 지난 5년 동안 취약한 정치적 기반을 극복하기 위해 한나라당과는 대립노선을 펴는 가운데 시민운동을 동원하는 전략을 구사했다면 노무현 정권 역시 이에 대한 고민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어쨌든 노무현 정권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취약한 정치 기반이다. 노무현 정권이 이 과정에서 어느 하나를 버리고 어느 하나를 취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위험한 곡예를 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더욱 높다.

(4) 노무현 정권의 대경제·재벌 정책

앞으로 노무현 정권 5년의 경제 정책의 핵

심은 한마디로 '새로운 시장'의 창출에 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바로 동북아 중심 국가로의 성장이라는 것으로 집약된다. 김대중 정권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핵심으로 한 경제 정책을 폈다면 노무현 정권은 구조조정이 이미 일상화·제도화 단계에 접어 든 조건 위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로 눈을 돌리려 할 것이다. 알다시피 세계 자본주의는 지금 경제 침체에 시달리고 있으며, 경제의 불안정성·불투명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하며, 언제 예기치 않은 공황을 맞을 것인가를 염려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본간, 국가간 경쟁은 날로 격화되고 있으며, 지역화를 통해 위기를 분산하거나 집단적 대응을 모색하려 하고 있다.

한편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경제권이 앞으로 세계 자본주의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특히 일본, 한(조선)반도, 중국,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는 유라시아 철도가 현실화 될 경우 새로운 실�크로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교역과 물류에서의 일대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자본은 그로부터 새로운 시장과 성장동력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노무현 정권은 바로 이를 성사시키는 것을 최대의 경제 정책으로 삼고자 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구상하고 있는 이러한 경제 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내 노사관계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자본 특히 재벌과의 관계에서도 대립적이지 않다는 이점을 안고 있다. 이는 김대중 정권이 추진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노동자 민중의 격렬한 저항과 투쟁을 불러일으킨 것과 재벌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을 안겨준 것에 비하면 정치적·사회적 지출 비용이 훨씬 덜 든다는 점에서 노무현

정권에게는 유혹·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알다시피 남북관계 및 한미, 북미, 북일 관계의 새로운 정착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바로 경제와 정치의 접점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현재로서 노무현 정권이 구상하고 있는 경제 정책의 성공 여부를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는 사실 이미 노태우 정권 때의 북방 정책이래 한국 자본주의가 활로를 찾기 위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중장기 구상의 일환이다. 다만 지금은 이의 추진과 집행이 현실적·실질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노무현 정권의 대재벌 정책은 기본적으로 김대중 정권의 정책을 계승하는 데 두고 있다. 현재 이는 총액출자제한제도 유지, 증권 집단소송제 도입,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채택, 구조조정본부 폐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 기존 재벌들로서는 결코 어려운 정책들로 벌써부터 이에 대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또한 자본은 '주5일 근무제' 도입에도 부정적이며, 노사관계에 대한 보다 강경한 대처를 주문하고 있다. 이 점에서도 노무현 정권과 재벌과의 관계는 상충하는 면이 없지 않다. 노무현 정권은 선거 공약과 당선 프리미엄을 앞세워 대재벌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으며, 재벌은 투자 특히 설비투자 및 경제 성장에 대한 협조 여부로 맞서고 있다.

(5) 노무현 정권의 대노동정책 : 신자유주의 아래에서의 사회적 합의주의 재 시도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의 핵심은, 신자유주의 기조 유지라는 전제 아래, 다시 한번 사회적 합의주의를 시도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다. '주5일 근무제', '공무원노조', '직권중재' 등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법개정과, 남동발전소 매각 문제 등에 따른 '민영화(사유화)' 정책, 그리고 비정규직 양산을 완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등에 대해 노무현 정권이 어떤 태도와 입장을 들고나올 것인가가 그것이다. 또한 기존 노조체계인 기업별 노조의 '산별노조'로의 전환에 대한 노무현 정권의 정책과 민주노동당, 즉 '진보정치'에 대한 태도도 사회적 합의주의 재 시도와 관련하여 노무현 정권이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상컨대 노무현 정권은 사회적 합의주의를 어떤 형태로든 재 도입하기 위한 시도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정권이 노사정위원회를 사실상 형식화·무력화시킬 수밖에 없었던 조건과 지형에 비해 결정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지만 노무현 정권은 정권 교체기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타면서 위에서 예시한 몇 가지 리트머스 시험지를 활용 카드로 들고나와 노동조합을 압박해 올 수 있다. 특히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아 쉽게 응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단위 노동조합 및 연맹을 앞세우고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한(조선)반도 및 동북아정세전망

(1) 노무현 정권의 대북 정책 : 햇볕 정책 계승

노무현 정권은 기본적으로 김대중 정권의 대북 정책, 즉 '햇볕 정책'을 이어가면서 이를 한층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노무현 정권의 정책이 어떻게 현실화될 것이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는 당연히

'북 핵' 문제 처리에 달려 있다. 노무현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전쟁이나, 평화나"를 앞세워 자신이 당선될 경우 '북 핵' 문제를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의 의지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는, 국내 계급 역학 및 정치지형에 의해 다시 한 번 걸러질 것은 물론, 북의 의지와 함께 미국의 의지가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에 따라 커다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정권은 자신의 의지가 북(조선) 및 미국의 의지에 따른 종속 변수 또는 매개 변수가 아니라 독립 변수 또는 상수가 되고자 하고 있다. 이의 성공 여부는 일차적으로 '북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얼마나 위상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 있다.

김대중 정권의 '햇볕 정책'은 지난 5년 동안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하는 수구·보수 세력으로부터 끊임없이 저항을 받아왔다. 특히 부시 정권 등장 이후로는 더욱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이 때문에 비록 6·15 남북정상회담과 공동선언을 통해 기존의 남북관계를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키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남북관계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불투명한 구조 위에 놓여 있었었다. 이러한 상황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후보는 대선에서 승리함으로써 일단은 유리한 고지위에서 '햇볕 정책'을 펴 나갈 수 있는 조건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북 핵' 문제가 전면적으로 터져 나온 속에서 당선됨으로써 그 무게는 더욱 실릴 수밖에 없다. 다만 '햇볕 정책'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정도로 워낙 크고 중대한 '북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된 것이 이후 노무현 정권

의 대북 정책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예컨대 '북 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된다면, 특히 노무현 정권의 역할이 반영된 결과로 그렇게 된다면, '햇볕 정책'과 노무현 정권의 대북 정책은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반대로 '북 핵' 문제 해결이 어려움에 빠지거나 교착 상태가 지속된다면 '햇볕 정책'과 노무현 정권의 대북 정책은 또 다시 역풍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어쨌든 노무현 정권은 대선에서 '햇볕 정책'을 앞세워 대북 정책을 정면돌파 함으로써 일단 국내 계급 역학이나 정치지형이라는 변수에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높아져 있는 것도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뒤집어서 말하면 그런 만큼 위험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다.

노무현 정권의 대북 정책은 이제 본격적으로 북의 '체제 유지(안정)' 정책과 '개혁·개방' 정책, 그리고 미국의 '세계 전략' 및 '동북아 전략'에 기초한 '대북 강경' 정책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먼저 북으로서는 '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개혁·개방'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노무현 정권과의 '공조'를 어떤 형태로든 필요로 하고 있다. 다만 북의 입장에서 볼 때 문제는 노무현 정권이 과연 한미 또는 한미일 동맹관계와 남북 또는 민족공조와 충돌할 때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노무현 정권의 의지뿐만 아니라 역량에 달려 있다고 할 때, 비록 과거에 비해서는 진전되고 있다고 해도, 아직은 역부족으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북이 남의 처지를 고려한 태도를 취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이점이 바로 남과 북 모두가 빠져 있는 딜레마가 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이 딜레마를 완화하기 위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을 이끌어 내고자 하고 있다. 이들을 내세워 북에게는 '모험주의'를 경계시키고, 동시에 미국의 '패권주의'에 제동을 걸어 줄 것을 주문하는 것이다. 이것들이 여의치 않거나 또는 그러한 움직임과 맞물려 노무현 정권이 택할 수 있는 어찌면 최종 카드는 '북 핵' 문제를 북미 문제에서 부분적으로 남북 문제로 전격 전환시키는 것이다. 지금까지 북은 '핵'을 포함한 '체제' 문제에 관한 한 미국과의 직접 상대를 원칙으로 삼아 왔다. 미국이 보장·보증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을 직접 상대하는 것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전술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이며 북 내부의 사정, 즉 군부 및 인민에게 그 동안 말해 온 것으로 보아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으로서도 끝내 미국과의 직접 상대가 막다른 골목에 들어설 경우에, 노무현 정권이 그런 제안을 해온다면 검토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2) 노무현 정권의 대미 정책 : 한미동맹 관계 유지와 대북 중재 역할 강화

노무현 정권이 취하고자 하는 또는 취할 수 있는 대미 정책의 핵심은 큰 틀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한미동맹 관계의 유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미동맹 관계라는 기조와 틀을 유지하되 한국 정부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자세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럴 수 있는 것은 한국의 역량 자체가 과거에 비해 커진 사실을 들 수 있다.

역으로 말하면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완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배경이 있다. 우선 북이 전면적인 '개혁·개방' 체제로 들어설 경우 남북 및 동북아 안보 정세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그 핵심은 미국에 대한 군사 의존도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 한국은 지금까지 미국의 안보 우산에 들어 있는 것 때문에 지불했던 대가, 즉 미국의 대북방(중국, 러시아) 군사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축소 또는 변경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맞게 된다. 예컨대 동북아 군사동맹, 즉 나토와 같은 체제가 논의 될 수 있다. 그런데 모든 군사동맹은 경제동맹 또는 경제블럭의 다른 표현이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유럽연합에 이어 또 다시 거대 동북아 경제블럭이 탄생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노무현 정권으로서는 이러한 흐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대미 관계를 제고시키려 할 것이다. 다음 한국 자본주의는 이미 대미 의존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보다 정확히는 한국 자본주의는 미국 시장에만 의존해서는 더 이상 성장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한국 자본주의가 그 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과잉축적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미 교역량에서 미국보다 중국이 앞서기 시작했으며, 중국이 당분간 고도 성장을 계속할 경우 이런 상황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노무현 정권은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성장을 국정운영의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방적인 대미 의존에서 탈피해야 할 객관적인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또한 국내 계급 역학과 정치지형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이번 대선 결과와 '촛불 시위'가 상징적으로 말해 주고 있듯

이 일방적인 '친미·반북' 세력의 입지는 상당히 위축되었다. 이 또한 노무현 정권의 대미 정책에 일정한 영향과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 역시 근본적으로 또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이해 자체를 거스를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다만 노골적이고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모양새를 벗어나 합리적이고 세련된 관계를 요구하는 수준에서 대미 관계를 풀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도 기존의 관계에 비하면 상당한 변화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노무현 정권의 대미 정책은 이와 같은 동북아의 변화와 국내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속도와 폭을 조절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으로서는 당장 부딪치고 있는 '북 핵' 문제와 관련하여 대미 정책을 풀어야 하는 실험대 위에 놓여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동북아 전략은 자신의 세계 전략을 유지·관철시키는 데 관건적인 사안으로 등장해 있다.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핵심은 대 중국 전략이다. 중국은 미국의 패권을 미래에 위협할 수 있는 국가로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대한 정책과 대북 정책은 기본적으로 대중 정책의 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은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된 사안이기도 하다. 북(조선)은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MD) 전략의 유일한 근거(불모)이자, 지난 9·11 사태 이후 부시 정권이 취하고 있는 군사 행동의 대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부시 정권으로서는 '북 핵' 문제는 더 없이 좋은 사안이다. 지금의 '북 핵' 문제가 터져나온 것도 길게는 제네바 합의 사항을 미국이 먼저 이행하지 않은 속에서,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지난 켈리 차관보 방북 이

후 미국이 일방적·의도적으로 만들어 낸 측면에서 시작된 것이다. 물론 북이 이에 대해 아직도 명확한 입장을 유보한 채 '핵' 문제를 사실 상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다. 예컨대 북(조선)으로서는 교착 상태에 빠진, 그리고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예의 극단적인 벼랑 끝 전술을 들고 나온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다고 할 때 현재 '북 핵' 문제는 어떤 면에서는 미국과 북(조선)이 각각의 입장에서 서로의 필요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지형에서 노무현 정권은 한편으로는 한미 동맹관계 또는 한미공조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개입하려는 태도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미국과 북(조선) 사이의 중재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통해 기존의 대미 관계에서 보여왔던 일방적인 동이나 추종을 완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어쩌면 미국과 북(조선)이 강하게 부딪치는 국면에서 오히려 노무현 정권의 역할이 가능할 수도 있는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

(3) 한(조선)반도 및 동북아 정세 전망

지금 한(조선)반도 및 동북아 정세는 '북 핵' 문제가 전면화 되어 있음으로 인해 과거 어느 때 보다 정치적·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 핵' 문제는 지금 단지 한(조선)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국한되지 않고 압박한 미국의 대 이라크 공격과 함께 세계적 문제로 떠올라 있다. 특히 '북 핵' 문제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세계 강국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어 이라크 사태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세계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다만 이라크 문제와 달리 '북 핵' 문제는 남북을 포함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이해 당사국이 모두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거나 원하고 있어 미국이 일방적으로 군사 행동을 감행하기는 쉽지 않은 조건이다. 알다시피 현재 미국은 북에 대해 선 '핵' 포기를 요구 있으며, 북은 미국을 향해 불가침조약을 제기하고 있다. 부시 정권은 내심으로는 북의 붕괴를 대북 기본 전략으로 삼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런 경우 미국은 자신의 영향력을 한(조선)반도 전체로 확장하여, 동북아 정세의 변화를 미국 주도로 짜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 러시아 등은 바로 이런 상황을 최악의 사태로 파악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한(조선)반도의 긴장 고조는 당장의 자신의 이익에 반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조선)반도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강화하고자 하는 기본적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부시 정권이 북으로 하여금 선 '핵' 포기를 강요하고 있는 것도 - 사실 이는 북의 입장에서 일방적인 항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 북을 더욱 압박·고압하여 체제 붕괴를 이끌어 내기 위한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북의 입장에서는 선 '핵' 포기 선언은 곧 항복으로 이어질 체제 붕괴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선 '핵' 포기 선언은 미사일 문제, 재래식 무기 문제 등 잇달아 미국의 요구를 불러올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으로서는 '핵' 문제를 지렛대로 어떻게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이끌어 내는 것만이 체제 유지를 하면서 '개혁·개방'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길을 틀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보는 것이다. 북이 끈질기게 미국에

게 불가침조약을 요구하는 것은 곧 미국으로 하여금 북의 붕괴 전략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다른 표현이다. 바로 이 부딪침이 지금 한(조선)반도와 동북아를 긴장으로 몰아 넣고 있는 직접적인 이유이다.

따라서 당분간 이 지역의 긴장은 쉽게 해소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는 어느 한 쪽이 자신의 정책을 거둬들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의 입장에서 북의 붕괴가 가장 바람직 하기는 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또 다른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결국 북이 어떤 형태로든 서방 세계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런 경우 한(조선)반도 및 동북아 정세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이 방향으로 흐름이 형성될 가능성이 보다 많다고 할 수 있다.

4. 2003년 경제 전망

1) 세계 경제

2003년 세계 경제를 전망하는 데 있어 주요한 변수는 미국의 대 이라크 공격이 가져올 효과이다. 부르주아 이데올로그들의 대체적인 분석은 이라크 공격이 단기에 마무리될 경우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장기화 될 경우에는 석유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여파가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에 세계 경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맞게 될 수 있다는 전망이 가능하다.

다음으로는 미국 경제의 향방이다. 미국 경제는 지금 경기 침체에 빠져 있으며 여기서 미국 경제가 이른바 이중 침체로 접어들